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의안 번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활동기간 : 2022. 12. 13. ~ 2025. 12. 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한정수 위원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난이 부위원장

분산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진형석 위원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민주화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권·이양이 요구됩니다.



김동구 위원

지역 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혁신적이고 실효성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절실합니다.



염영선 위원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공주도 해상풍력, 연계 산업 발전으로 전북이 탄소중립 선도지가 되길 당부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실천적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김정기 위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원 등 전북이 보유한 탄소중립 분야의 강점을 살릴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농생명단지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이차전지 기업 유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RE100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권요안 위원

전북도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성수 위원

전북도는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과 협력체계 강화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슬지 위원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참여 공동체 육성과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요구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진



【제1차 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022. 12. 13.)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정수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난이 위원**







【제2차 회의】 업무보고 청취 (2022. 12. 28.)



총괄부서 격상을 주문하는 **한정수 위원장**



탄소배출 관련 질의하는 **서난이 부위원장**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질의하는 **염영선 위원**



새만금 산단 관련 질의하는 **김동구 위원**



주민 교육과 홍보를 주문하는 **이수진 위원**

【제3차 회의】 활동계획서 채택 (2023. 2. 9.)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한정수 위원장**



활동계획에 대해 질의하는 **위원들**



【제4차 회의】 업무보고 (2024. 7. 25.)



회의를 진행하는 **한정수 위원장**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제5차 회의】 업무보고 (2025. 2. 20.)



회의를 진행하는 **한정수 위원장**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제6차 회의】 업무보고 (2025. 7. 24.)



회의를 진행하는 **한정수 위원장**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제7차 회의】 업무보고 (2025. 11. 20.)

【정책토론회】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 (2023. 2. 23.)



전북만의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다짐 **기념촬영**



영상 인사를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축사하는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제발표하는 **민선식 특자도 추진단장**



주제발표하는 **장남정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정책토론회 **좌장과 발제 및 토론자**



좌장으로 진행하는 **한정수 위원장**



토론회에 몰입하는 **서난이·염영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정수 위원장**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진형석 위원**

【포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 (2023. 4. 10.)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및 지속협 임원진**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강의하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



포럼에 참석한 **특위 위원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등



축하 인사하는 **국주영은 의장**



개회 인사하는 **한정수 위원장**

【토론회】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 (2023. 7. 24.)



한정수 위원장 및 조봉업 행정부지사 등 주요 참가자 탄소중립 다짐



토론회 **좌장과 발제 및 토론자**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정수 위원장**

【토론회】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2025. 2. 4.)



토론회 **좌장과 발제 및 토론자**



토론회 개최 축하 **기념촬영**



토론회 참가자 **기념촬영**



【토론회】 탄소중립 기획 포럼(1차) (2025. 3. 20.)



포럼 **좌장과 발제 및 토론자**



포럼 개최 축하 **기념촬영**



포럼 개최 인사하는 **한정수 위원장**

【토론회】 탄소중립 기획 포럼(2차) (2025. 4. 3.)



포럼 **좌장과 발제 및 토론자**



포럼 개최 축하 **기념촬영**



축하인사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임성진 위원장**



【토론회】 탄소중립 포럼 (2025. 7. 30.)



포럼 **좌장과 발제 및 토론자**



포럼 개최 축하 **기념촬영**



축하 인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정수 위원장**

【세미나】 탄소중립 세미나 (2025. 11. 20.)



세미나 참석 의원 및 관계자 **기념 촬영**



축하 인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정수 위원장**



세미나 진행하는 **한정수 위원장**



【연석회의】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 전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2023. 3. 7.)



탄소특위 및 탄녹위 위원 연석회의 기념 촬영



양 위원회의 소통과 협력을 당부하는 **한정수 위원장**



소통과 협력 의지 표명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임성진 위원장**

【현장 활동 ①】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2023. 3. 16.~17.)



탄소중립 실현을 다짐하는 **탄소특위 위원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정수 위원장**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추진 상황 보고하는 **장남정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자연생태공원에서 **특위 위원과 직원들**

【현장 활동 ②】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2024. 9. 24.~ 25.)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임원진과 탄소특위 위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임원진과 간담회 진행**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에서 **탄소특위 활동**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과정 안내 청취



우드칩 저장고에 대한 설명 청취

【성명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반대 (2023. 4. 20.)



국가 기본계획 반대 성명 참가 **전북 환경단체 대표와 한정수 위원장**



성명서 낭독하는 **한정수 위원장**



기자에게 질의·답변하는 **한정수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제출)함.

2025. 12. 12.

위 원 장	한정수
부위원장	서난이
위 원	진형석
위 원	김동구
위 원	염영선
위 원	국주영은
위 원	이수진
위 원	김정기
위 원	권요안
위 원	김성수
위 원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목 차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31

1-1. 구 성 목 적 33
1-2. 구 성 경 과 33
1-3. 위 원 회 구 성 34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35
1-5. 활 동 기 간 35
1-6. 중 점 활 동 방 향 35

제2장 주 요 활 동 상 황 37

2-1. 특 위 활 동 일 지 39
2-2. 회 의 개 최 46
2-3. 간담회 및 보고회 개최 76
2-4. 연 석 회 의 개 최 88
2-5. 토론회·포럼 등 개최 89
2-6. 현 장 활 동 121
2-7. 성 명 서 · 기 자 회 견 122
2-8. 5분 자유발언·도정질문 129
2-9. 조 례 제 · 개 정 148

제3장 주 요 활 동 결 과 175

3-1. 특 위 활 동 성 과 177
3-2. 특위활동의 아쉬운 점 183
3-3. 정 책 제 언 184
3-4. 맺 음 말 188

제4장 부 록 189

4-1. 주 요 일 간 지 보 도 191

contents

제 1 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1. 구성 목적 33

1-2. 구성 경과 33

1-3. 위원회 구성 34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35

1-5. 활동 기간 35

1-6. 중점 활동 방향 35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1. 구성 목적

○ 탄소중립은 국가비전이자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수반되는 것들은 경제발전의 문제이고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문제로 산업경쟁의 문제로 귀결됨.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정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1-2. 구성 경과

○ 구성발의 : 한정수 의원 외 11명 발의(2022. 10. 27.)
○ 의안심사 : 제39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2022. 11. 21.)
○ 발의의결 :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13.)
○ 위원선임 :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12. 13.)
○ 연장발의 : 한정수 의원 외 10명 발의(2023. 10. 27.)
한정수 의원 외 9명 발의(2024. 11. 5.)
○ 연장심사 : 제405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2023. 11. 08.)
제41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2024. 11. 08.)
○ 연장의결 :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11. 20.)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0.)
○ 위원개선 :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4. 11. 08.)

1-3.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11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 위원 명단 (소속 상임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위원장	한 정 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서 난 이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진 형 석	교 육 위 원 회	위 원	김 동 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염 영 선	기획행정위원회	위 원	이 수 진	기획행정위원회
위 원	김 정 기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 원	국주영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 원	권 요 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 원	김 성 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 원	김 슬 지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 개선(윤정훈→국주영은):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4.11.08.)

○ 활동지원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 박 동 우
- 예산결산 전문위원 : 김 형 완
- 직원(10): 담당직원 6, 속기사 1, 방송요원 1, 사진기사 1, ENG 1

○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

가. 활동대상 기관

○ 중 앙 : 국회, 중앙부처 등

○ 지 방 :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그 산하기관 등

나. 사무 범위

○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무 일체

1-5. 활동 기간

○ 당초 활동기간 : 2022. 12. 13. ~ 2023. 12. 12.

○ **변경 활동기간 : 2022. 12. 13. ~ 2025. 12. 12.**

1-6. 중점 활동 방향

○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 중앙정부, 타 지자체 동향 파악 및 분석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 사회, 노동, 교육, 행정 등 각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및 민·관·정·학 협의체 구성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과제 및 이행역량 기반조성 사업 발굴

○ 탄소중립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선진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 탄소중립 성과 제고를 위한 토론회·세미나 개최 및 탄소중립의 이해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 기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현안 파악 및 언론 대응 등

contents

제 2 장

주요 활동 상황

2-1. 특위 활동 일지 39

2-2. 회의 개최 46

2-3. 간담회 및 보고회 개최 76

2-4. 연석회의 개최 88

2-5. 토론회·포럼 등 개최 89

2-6. 현장 활동 121

2-7. 성명서·기자회견 122

2-8. 5분 자유발언 · 도정질문 129

2-9. 조례 제·개정 148

제 2 장 주요 활동 상황

2-1. 특위 활동 일지

【 특위 구성 】

○ 2022. 10. 27.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한정수 의원 외 11명)
(제396회 정례회, 의안번호 193번)

○ 2022. 11. 21.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회 통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2. 12. 13.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22. 12. 13.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1명)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22. 12. 13. : 특별위원회 위원장(한정수) 및 부위원장(서난이) 선임
(제396회 정례회 제1차 탄소중립특별위원회)

○ 2024. 11. 08. :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윤정훈위원→국주영은위원)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특위 연장 】

○ 2023. 10. 27.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발의(한정수 의원 외 10명)
(제405회 정례회, 의안번호 687번)

○ 2023. 11. 08.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운영위원회 통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3. 11. 20.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4. 11. 05.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발의(한정수 의원 외 9명)
(제415회 정례회, 의안번호 1247번)

○ 2024. 11. 08.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통과
(제41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024. 11. 20.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회의 개최 】

○ 2022. 12. 13. :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2. 12. 28. :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전북도 탄소중립 정책 및 관련 사업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환경녹지국,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건설교통국,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 2023. 2. 9. :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 2024. 7. 25. :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 2025. 2. 20. :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도 및 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 2025. 7. 24. :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도 및 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 2025. 11. 20. :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도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간담회 · 보고회 개최 】

○ 2022. 12. 13. : 특별위원회 제1차 간담회 개최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방법·절차 및 활동계획 협의 등

○ 2022. 12. 28. : 특별위원회 제2차 간담회 개최
- 업무보고 관련 협의 등

○ 2023. 2. 9. : 특별위원회 제3차 간담회 개최
-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등

○ 2023. 5. 24. : 특별위원회 제4차 간담회 개최
- 6월 회기중 집행부 면담 및 기구 추가 건의 건 등

○ 2023. 6. 19. : 특별위원회 제5차 간담회 개최
- 행정부지사와 전북도 탄소중립 정책 관련 소통·간담 등

○ 2023. 10. 20. : 특별위원회 제6차 간담회 개최
- 특위 활동기간 연장(2023.12.13.~2024.12.12.(1년) 등

○ 2023. 12. 28. : 특별위원회 제1차 보고회 개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수렴 등

○ 2024. 1. 25. : 특별위원회 제7차 간담회 개최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등

○ 2024. 12. 13. : 특별위원회 제8차 간담회 개최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등

【 연석회의 개최 】

○ 2023. 3. 7. : 전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연석회의 개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양 위원회의 협력 및 소통 등

【 토론회 · 포럼 등 개최 】

○ 2023. 2. 23. :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 참석인원 : 100여 명(의장, 도의원, 행정부지사, 전북도당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 관련 발표 및 토론 등

○ 2023. 4. 1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

- 참석인원 : 50여 명(의장, 특위위원, 관계 기관 및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IPCC 6차 보고서 분석을 통한 국가 및 지방정부 대응

○ 2023. 7. 24. :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 참석인원 : 80여 명(특위위원, 행정부지사,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 방향 토론

○ 2025. 2. 4. :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참석인원 : 200여 명(특위위원, 전북도당·익산시 탄소중립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등

○ 2025. 3. 20. : 탄소중립 기획포럼(1차)

- 참석인원 : 80여 명(특위위원, JBS 탄소중립 포럼,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전북의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안 모색 등

○ 2025. 4. 3. : 탄소중립 기획포럼(2차)

- 참석인원 : 70여 명(특위위원, JBS 탄소중립 포럼,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 2025. 7. 30. : 탄소중립 포럼

- 참석인원 : 50여 명(특위위원, JBS 탄소중립 포럼,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 2025. 11. 20. :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참석인원 : 30여 명(특위위원, 전북도 탄녹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 관련 사례 제시 등

【 현장 활동 】

○ 2023. 3. 16. ~ 3. 17. : 연찬회(고창군 일원)

- 전북 탄소중립 실현 '고창운곡 람사르습지' 탐방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청취

○ 2024. 9. 24. ~ 9. 25. : 현지 의정활동(완주군 일원)

- 현대차 임원진과 간담회 및 수소 버스·트럭 생산 공장 시찰
-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과정 청취 및 활용 현장 시찰

【 성명서 · 기자회견 】

○ 2023. 4. 20.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반대 성명

- 절망과 불확실성만 빼곡히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반대

○ 2024. 10. 31. :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 선포 전국 동시 기자회견

【 5분 자유발언 · 도정질문 】

○ 2023. 2. 2.(5분 자유발언) :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방안 마련 촉구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2023. 6. 8.(도 정 질 문)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수소 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 대안 마련 촉구
(제4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3. 7. 24.(5분 자유발언) :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3. 10. 11.(5분 자유발언) : 14개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4. 4. 19.(5분 자유발언) : 새만금 재생에너지 도내 활용 방안 마련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4. 9. 10.(5분 자유발언) :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 추진단 신설 제안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4. 10. 8.(도 정 질 문) : 탄소중립,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도해야
(제4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2025. 4. 23.(5분 자유발언) : 탄소중립추진단을 만들어서 탄소중립을 전북의 먹거리로 만들어 보자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조례 제·개정안 】

○ 2023. 4. 14. :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의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3. 12. 13. : 「전라북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결
(제4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24. 5. 17.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4. 6. 19. :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제41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2024. 10. 17. :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의결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2025. 4. 3.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2. 회의 개최

2-2-1. 제1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2. 12. 13.(화) 11: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1명
- 특위위원(11)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권요안·김동구·김성수·김슬지·김정기·염영선·윤정훈·
이수진·진형석 위원

○ 안　　건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 회의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회의 결과

○ 제1항 : 위원장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 선임
○ 제2항 : 부위원장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 선임
○ 제3항 :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2-2-2. 제2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2. 12. 28.(수) 10: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2명
- 특위위원(5)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김동구·염영선·이수진 위원
- 집 행 부(7) : 기업유치지원실장, 정책기획관, 환경녹지국장, 미래산업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안　　건 : 전라북도 탄소중립 정책 및 관련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회의 내용

○ 탄소중립 정책 및 관련사업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

소관부서	보 고 내 용
환경녹지국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행계획 수립 등
기업유치지원실	탄소중립관련 기업지원 및 일자리 전환 등
미래산업국	에너지 전환관련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친환경스마트화 등)
농생명축산식품국	저탄소 생태농업 전환, 친환경 축사시설
건설교통국	녹색건축물・녹색교통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전라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업무

※ 배석: 정책기획관

□ 질의·답변 내용

〈 한정수 위원장 〉

○ 탄소중립 실현은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고, 경제문제이고 산업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임. 전라북도와 도의회, 도민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북은 환경녹지국장이 담당하고 있음. 도지사 직속 담당관제에서 총괄해야 예산계획과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봄. 정책기획관에서 검토 바람.

➡ (환경녹지국장) 총괄 조정기능을 하도록 환경녹지국장에서 부지사까지 책임관 지정을 격상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전라북도만의 특색과 강점, 장점을 발굴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외부전문가들, 시민단체, 도민 등과 소통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환경녹지국장) 올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7대 부분 46개 세부사업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음. 2023년 상반기에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 염영선 위원 〉

○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탄소제로란 말인가, 용어 정리 의미는?

➡ (환경녹지국장) 온실가스 발생량만큼 감축활동으로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탄소중립 상태라고 함.

○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추진이 어느 정도인지?

➡ (환경녹지국장) 국가에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는데 2030년까지 약 40% 감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음. 2030년도 목표가 2018년 배출량 약 7억 2,700만t보다 40% 감축 하고 291만t을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2018년 기준이 약 2,480만t인데 2030년까지 1,490만t을 감축하는 것이 전라북도 목표임.

○ 탄소중립 측면에서는 전라북도가 가장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 (환경녹지국장) 통계치가 전국 대비해서 아직은 부재한 상태이고 국가계획이 2023년도 3월에 시도별 수치가 나올 예정임.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배출량의 3.4% 정도 차지하고 있어 배출량이 큰 지역은 아님.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나 여러 산업을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2030년 목표 달성은 타지역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함. 정확한 분석은 2023년도 기본계획 수립 후 이행평가 결과가 나온 후 가능할 것임.

○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조성에서 CO_2 흡수량이 소나무가 의외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소나무 하면 재선충이 문제인데 현황과 확대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환경녹지국장) 재선충은 잘 관리하고 있고, 정읍 재선충은 해제를 해준 상태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음.

○ 탄소중립 관련 기업지원 및 일자리 전환에서 지역대학 및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너무 막연하고 모호함.

➡ (기업유치지원실장) 구체화시켜서 실행하겠음.

○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 바람.

➡ (미래산업국장)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를 기화로 군산 CSWIND가 이전해왔고, H사, D사 등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음.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 전라북도가 농도이다 보니 타시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데 모델로 삼는 나라는? 농식품 부분에서 감소를 잘하고 있는 나라는?

➡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북유럽 쪽 네덜란드나 덴마크임.

농업분야에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하면서 시설원예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부분을 같이 추진하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무엇인지?

전주에도 지하철이 있었으면 하는 도민의 바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말하고, 서울의 경우가 중앙차선 쪽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었음. 전주시가 내년에 기린대로를 처음으로 BRT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지하철은 교통수요가 있어야 가능한데 전주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건설 후 운영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김동구 위원 〉

○ 군산해역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미래산업국장) 군산은 후보지로 올해는 5월 공모를 해서 후보지 단계이고 다음 단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될 계획임.

○ RE100 클러스터, RE100 산단 진행은 어떤지?

➡ (기업유치지원실장)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RE100 산단을 만드는 곳이 새만금 산업단지이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도가 지원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음.

○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기업유치지원실장) 새만금 산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차전지와 탄소중립 관련해서 문의도 하고 입주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음. 기업들을 우선순위를 매겨 잘 배치해서 새만금 개발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 이차전지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경북 포항, 울산, 충북, 전남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북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기업유치지원실장) 새만금도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새만금 산단이 타 지역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지?

➡ (기업유치지원실장) 새만금 산업단지가 토지와 인프라 구조 부분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낫다고 판단하고 매매와 임대가가 저렴한 것을 기업들에 홍보하고 있음.

○ 연구개발센터 유치, 인력양성센터 구축, 집적화 클러스터 단지 구축 등 추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정책기획관께서는 민·관·학, 의회 등 TF팀 구성을 요구하고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서난이 위원 〉

○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단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선언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전력자립률의 상승,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보급률 등 7~10개 정도 현황판을 만들어서 도의회와 도청에 걸어놓고 매년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 분리수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 PLA컵 사업이 의미가 없어졌는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전북이 탄소

배출이 전국에서는 적은 수치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무엇인지?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80%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함.

〈 이수진 위원 〉

○ 주민들에게 와닿는 정도의 설명이나 홍보가 필요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려보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봄.

□ 요구자료

소관	자료요구 내역
전라북도	1. 정읍 재선충 관련 자료(염영선 의원) 2.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및 업무협약 체결 진행현황(염영선 의원) 3.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 발굴 전략사업 현황(한정수 위원장) 4. TF팀 구성 진행상황(김동구 의원)

2-2-3. 제3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3. 2. 9.(목)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9명

- 특위위원(9)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김동구·김성수·김슬지·김정기·염영선·이수진·진형석 위원

○ 안　　건 :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회의 내용

○ 탄소중립 특위 활동 계획안 보고(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위원들의 추가·보완사항 의견 개진

□ 회의 결과

○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 활동계획서 부록 별첨

2-2-4. 제4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4. 7. 25.(목) 10: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2명

- 특위위원(6) : 한정수 위원장, 진형석·김동구·염영선·이수진·권요안 위원
- 집 행 부(6) : 환경산림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첨단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안　　건 : 전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 상황 등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 회의 내용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 상황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

소관부서	보 고 내 용
환경산림국	·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 ·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등
건설교통국	·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 그린리모델링 추진
미래첨단산업국	·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기반 구축 ·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이차전지 산업 육성 추진
농생명축산산업국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탄소중립 저탄소한우 축군 조성사업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지원
새만금해양수산국	· 공공우분연료화 시설 설치 ·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 전북형 블루카본 조성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 질의·답변 내용

〈 한정수 위원장 〉

○ 탄소세가 내년에 도입되는데 국가나 도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우리도가 앞서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모든 실국이 준비해서 당장 시행해야 됨.

○ 또한 탄소중립을 하는 이유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이고 수해, 폭염 등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탄소중립추진단이 요구되며 전체 실국이 협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람.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 없이도 우리 도가 결심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

○ 계통망 관련해서 새만금의 해상풍력, 태양광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망을 만들어야 하며, 특례를 통해 요구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들도 인식하게 해서 한전의 독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봄.

➡ (환경산림국장)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올해 환경국이 대표로 편성했고, 내년에 4개국으로 확대 예정임. 지방은 법 개정이 지연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행계획 지침이 환경부에서 8월에 내려오면 지침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이행평가를 연말까지 시범으로 실시하고, 현재는 내년말부터 실시되는 평가를 준비하고 있음.

➡ (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계통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할 때, 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음. 이를 지역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임.

〈 염영선 위원 〉

○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이 연관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한다는 것인데 그 취지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물음. 또한, 한전에서 34만 5천볼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묻고, 환경, 건강권, 재산권 등 도민에 큰 영향을 주는데 도민과 도의원도 모르게 추진되는 것은 문제이고 RE100이 필요한 사업이면 새만금 일대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봄.

➡ (미래첨단산업국장) CS윈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고, 민간의 경우 완성업체 입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송전선로가 어느 노선으로 갈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으로 사업시행자인 한전과 정리가 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음.

○ 새만금 부지에서 발생한 전기로 인해 수도권과 한전이 이익을 보고 우리는 피해만 보는 일은 없어야 함.

➡ (미래첨단산업국장) 전북도의 에너지 전력 자급률이 67%로 33%는 충남 석탄이나 전남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서남권 해상풍력이 2.4GW가 들어오면 자급률이 100%가 될 것으로 보임.

〈 권요안 위원 〉

○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K-패스, 행복콜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봄.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되는데 획기적인 방안인 광역교통망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봄. 14개 시군의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빨리 형성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중교통 분담률 상향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겠음.

➡ (건설교통국장)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으로 대광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교통계획을 활성화해야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진형석 위원 〉

○ 다회용기 회전률이 어느 정도 돼야 탄소중립에 효과가 있으며, 에코백, 텀블러 사용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탄소중립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환경산림국장) 수치적으로 분석은 안했지만 이행평가를 통해 계량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획 중에 있음.

○ 행복콜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택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택시회사가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함. 또한 자율주행차 사업과 관련하여 선유도의 경우 10여대가 미운행하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군산과 같이 실패를 거듭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건설교통국장) 군산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다가 중단된 상황이며, 실태 검토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예정임.

○ 민간 태양광 보급이 인허가 물량 대비 개시 물량이 반도 안되는 이유와 인허가 과정에서 계통연계가 먼저 검토되고 인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지에 대해 묻고, 인허가 시 계통연계를 먼저 확인하고 인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함.

➡ (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허가를 주지 말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해중림 감축량이 ha당 7.97톤이라고 돼 있는데 해중림을 조성할 때 ha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음.

➡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건강성지수, 갯녹음 해소율, CO2 저감 기초자료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김동구 위원 〉

○ 탄소중립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받고 수정하는 등 탄소중립에 관한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TF팀 구축을 건의함

➡ (한정수 위원장) TF팀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같은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 추진했으면 함.

2-2-5. 제5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5. 2. 20.(목) 10: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2명
- 특위위원(6) : 한정수 위원장, 진형석·염영선·국주영은·이수진·서난이 위원
- 집 행 부(6) : 환경산림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첨단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책기획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안　　건 :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3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회의 내용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

소관부서		보 고 내 용
전북도	환경산림국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환경산림국 등 5개국	· 탄소중립 이행과제 추진 현황 *정책기획관 배석 -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전북탄소중립 지원센터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도교육청	교육국	· 전북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현황

□ 질의·답변 내용

〈 한정수 위원장 〉

○ 도지사가 위원장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실제 추진체계상 부지사 아래에 배치된 것은 구조적으로 부적절**하며, **이행책임관을 부지사로 지정한 것 또한 문제임. 최종 의사결정권은 도지사와 민간공동위원장이 있는 탄녹위에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함.

➡ (환경산림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음.

○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도내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이 아닌 지하케이블 방식의 자체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함. 한전 독점 구조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에 이를 과감히 요구할 수 있는 전략과 대책을 강구**해야함.

➡ (미래첨단산업국장)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겠음

○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람

➡ (환경산림국장) 매년 점검하고 전년도 기준은 3월 계획 수립해서 점검하고 4월까지 제출하고 보고하겠음.

○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중에 달성한 것, 폐기한 것, 업그레이드한 것이 파악되었는지 확인함.

➡ (환경산림국장) 정량, 정성, 정책사업별로 분리해서 72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음. 보고하도록 하겠음.

○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신규 택지 개발·신축 건물 설립 시 태양광, 풍력발전기 설치 등 재생에너지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함

○ 탄소중립 정책에서 이차전지는 매우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이 필요함.

○ 탄소배출 감축 외에도 산림, 갯벌 등 흡수원을 통한 흡수량 확보 방안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근거와 대응 대책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함.

○ 탄소중립센터는 단순 지원 조직일 뿐, 사업 총괄 기능이 아님. 어렵거나 민감한 사안을 센터가 대신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함

○ 그린교통 실현을 위해서는 무상교통 도입이 필요함

➡ (건설교통국장)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있음.

○ 전주와 연결한 시군 중 BC가 나올 수 있는 시군이 있는지와 대광법이 통과되면 도로교통, 철도교통 계획이 있는지 물음.

➡ (건설교통국장) 대광법이 들어가는 광역교통시설 계획의 경우 도로, 광역도로 등이 있음. 상반기에 대광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반영할 우리 도의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도 자체 용역을 해서 사업 발굴을 할 계획임.

○ 탄녹위가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관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담 사무처 설치가 필수적임. 사무처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함.

➡ (환경산림국장) 보고 하겠음.

〈 염영선 위원 〉

○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로 미래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실천관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함.

➡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교육이 단순한 학문 전달을 넘어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시작해 세계 시민교육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 ESG 교육을 10대 교육 과제로 포함해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경영의 투명성, 청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교육을 추진 중임.

○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확산단지를 지정 및 사업공모자를 2월에 하는지와 확산단지가 확정된 것인지를 물음

➡ (미래첨단산업국장) 집적화단지 지정이 되어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임. 1GW 부분만 확정됨.

○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비할지도 중요함. 송전선로 건설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책위가 승소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임.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긍정적이나,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호남권이 송전선로로 인해 환경이나 주민이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춰 기업 유치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을 당부**함.

➡ (미래첨단산업국장) 법적 제도적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국주영은 위원 〉

○ 모든 국에서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추진중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생산 계획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함.

➡ (미래첨단산업국장) 3GW는 풍력에 의해서 나머지 4GW가 태양광에 의해 이뤄짐.

○ 수상태양광과 육상태양광을 활용해 **RE100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지만 추진이 매우 지연**되고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추진 현황**이 있는지 문의함.

➡ (미래첨단산업국장) 현 정부가 원자력에 중점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 두군데 정도 준비하고 있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음.

○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생명단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RE100 정책 수립**도 중요함.

➡ (미래첨단산업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대광법 추진 상황을 질의함

➡ (건설교통국장) 26일 법안소위 예정이고, 27일 전체 회의 예정임. 2~3월 임시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력함.

○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망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대중교통을 통한 쉽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건설교통국장) 용역을 통해서 노선의 중복이나 신설구간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이수진 위원 〉

○ 탄소중립 교육 교재인 '우리함께 초록 더하기'가 종이책인지 디지털 웹 자료인지를 질의함.

➡ (민주시민교육과장) 종이 책자는 샘플이고, 학교에는 PDF자료가 링크되어 있음.

○ **3·4**학년 대상 선정 이유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장기 계획**에 대해 질의함.

➡ (민주시민교육과장) 1, 2학년은 너무 저학년이고, 고학년은 별도의 과정이 있어서 3, 4학년으로 선정하게 되었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하여 성질별 구분을 중립과 감축으로 나눴는데 분류 기준을 물음.

➡ (환경산림국장) 예산편성 지침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지침에 의해 분류함.

○ 중립사업이 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감축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함.

➡ (환경산림국장) 배출사업을 감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음.

○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하여 한옥마을의 일회용컵 등 무인회수기 배치 현황에 대해 물음.

➡ (환경산림국장) 도내 무인회수기는 120개 정도로 전주시내에 20개 정도임. 전주 한옥마을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전주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진형석 위원 〉

○ 탄소중립 거래제 활성화 추진 현황과, 민간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주문한 이후 실제 배출권 거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환경산림국장)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진행중임.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작년에 전문기관을 불러 시군과 기관, 민간기업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전문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자리를 마련함. 김제시나 일부 지자체가 있고, 민간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실제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기간이 최소 10년이상에서 21년까지 걸려 회수기간도 오래 걸리고 유지관리 비용 문제로 선뜻 진행을 못하는 상황임.

○ 강원도는 민간의 배출권 거래 참여를 관이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음. 전북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2-2-6. 제6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5. 7. 24.(목) 14: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3명

- 특위위원(6)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김동구·염영선·국주영은·이수진 위원
- 집 행 부(7) :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교통정책과장,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도교육청 교육국장

○ 안　　건 :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4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회의 내용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현황 점검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

소관부서		보 고 내 용	비 고
전북도	환경산림국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환경산림국 등 5개국	· **탄소중립 사업 추진 현황 등** -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도교육청	교육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현황** (교육시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포함)	

□ 질의·답변 내용

〈 한정수 위원장 〉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미비)** 법적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며 행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화/사업화하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 향후 대책 요구.

○ **(도전적 행정의 부재)** 선제적인 노력을 독려하는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전북도가 재원 부족 등 변명을 들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경향 지적.

○ **(컨트롤타워 부재)** 기조실장의 회의 불참 및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지 부족을 지적하며 도의 문제점 강조.

○ **(수소 생산 시설 현황 및 경쟁력 확보)** 도내 수소 생산시설 현황(완주, 부안 약 4~5MW) 및 자급률 미달 언급. 그린수소 생산 확대 및 경쟁력 확보 노력 부족 지적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부안에 수전해 생산설비 실증 구축 중이나 경제성 문제로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

○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 및 소극적 태도)** 서해안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연 및 재원 부족을 핑계 삼는 도의 태도 비판. 분산에너지 특구 및 탄소중립 선도 도시 유치 실패 지적.

○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문제점)** 농축산 부문 200% 달성, 폐기물 3.5% 달성 등 불균형한 감축률을 계획의 문제로 지적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 결과 자료 제출 요구

○ **(계통 접속 및 전북 배정량)** 산업부의 호남 지역 2.3GW 계통 접속 배정 발표와 관련하여 전북에 배정된 양 및 새만금 수상 태양광의 계통 선점 현황을 질의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계통을 선점하고 있으나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호남권 전체에 배정된 것으로, 각 변전소별 태양광 발전 접속 대기 순서에 따라 접속이 이루어지므로 현재 시점에서 전북에 할당된 구체적인 양은 알기 어렵다고 밝힘. 신규 태양광 사업은 2031년

이후 접속 조건으로 허가가 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조속한 접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덧붙임

○ **(지방시대위원회 및 컨트롤 타워 부재)**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대선 공약 사업 관리 등)을 강조하며, 기조실장이 회의에 불참하고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 도에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조실장 및 정책기획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대책을 보고할 것을 요청

○ **(SK AI 데이터센터 및 기업 유치)** SK가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만금 데이터센터 협약을 맺었음에도 울산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뉴스에 대해 도의 대응이 없음을 지적. RE100 산단의 최적지인 새만금의 이점을 활용하여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유치지원실 등 유관 부서 간의 연계된 기능 작동을 촉구

○ **(새만금 햇빛 에너지 고속도로 제안)** 새만금 동서도로 남측 사면에 태양광(약 2GW 발전량 예상)을 설치하여 도민에게 에너지 소득이 돌아가도록 사업화하고 국가 지원을 받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 유관 부서(새만금청, 익산국토관리청, 전북개발공사 등) 간의 주무 부처 일원화를 요청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부서 간 이원화된 부분과 관리 주체를 인정하며, 현재로서는 사업 계획 수립보다는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 (이후 배 과장은 동서도로 사면이 장기적으로 매립 부지 계획으로 없어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충 설명.)

○ **(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 확대)** 탄소중립의 수용-실천-확산을 위해 교육청의 교육과 연계하여 무인회수기 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현재 도내 무인회수기는 113대, 올해 27대 보급 예정이며, 내년에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도의 부정적 태도)** 전북이 농도임에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향후 계획 및 추진, 연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질의. (답변은 이어지지 않음)

○ **(맺음말)** 이재명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비해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하며, 국정 과제 반영률이 높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표명. 방법과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노력에 대한 책임 면제를 약속하고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힘. 길어진 회의 시간과 일부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회의를 마무리

〈 서난이 의원 〉

○ **(RE100 산단 지정 관련)** 전남에 비해 전북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서남권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도의 준비 상황 질의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신규 산단 조성 기간이 길어 기존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산단 활용 논리 강조. 새만금 지역의 전력 계통 여유와 재생에너지 공급 차질 없음을 강점으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 중

○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관련)** 전북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지적 및 관련 활동 질의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환경부와 산업부로 이원화된 정책 일원화 목적이며, 현재 RE100 산단 유치에 방점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설명.

○ 전남의 전략적인 움직임(세미나, 관계 부처 초청 등)을 언급하며 전북의 보다 도전적인 노력을 당부. 의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기후에너지부 새만금 또는 혁신도시 유치에 강력히 주장할 필요성 강조.

○ 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이용 교육 관련 협조 공문 및 회신 요구

〈 이수진 의원 〉

○ **(수송 부문 소요예산 (1,034억 원) 세부 내역)** 예산 배분 내역 및 세부 부문별 예산 정보 질의

◘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BRT 환승센터 구축, 알뜰교통카드,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 등 4가지 구성이며, 세부 예산 배분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다고 답변

○ **(톤당 감축비용 기준 성과 분석 자료)** 부문별 감축 효과 분석 자료 유무 질의.

◘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자체 성과분석 및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통해 감축실적 273만t (달성률 106%) 달성했으며, 부문별 데이터는 별도 제출 예정.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vs 대중교통 전환 정책 상충 여부)** 두 정책 간의 상충 가능성 및 분석 여부 질의.

◘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약간의 상충 가능성은 있으나, 전기차/수소차도 대중교통으로 활용되므로 아직 분석한 적은 없다고 답변. 향후 분석 계획.

○ **(도시 중심 BRT 및 농촌 행복콜 서비스 예산 배분 기준)**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기준 질의.

◘ (김정중 교통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으며, 행복콜 서비스에 약 116억 원, 행복콜 택시에 약 40억 원이 배정됨. 14개 시군에 고르게 배분 중이며, 세부 자료는 별도 제출 예정. 도시형과 농어촌형은 각각 국토부와 농식품부에서 따로 진행되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

○ **(지연 및 미달성 사유 및 조치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바이오차 토양개량제 생산,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동 전개 등의 지연/미달성 사유 및 조치 계획의 구체성 부족 지적

◘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융복합사업 정산 지연, 태양광 설치용량 파악 어려움, 사업계획 변경, 보조사업자 포기, 진단컨설팅 미추진, 유지보수 비용 증가, 국비 예산 삭감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 사업 지표 변경 및 신규 대체사업 발굴 계획. 향후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구체적인 조치 계획 수립 약속

○ **(교육청 녹색건축물 본인증 소요 기간 (2년) 관련)** 예비인증에서 본인증까지 2년이 걸리는 이유 질의

◘ (윤영임 교육국장) 예비인증은 설계 단계, 본인증은 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학교 신축 및 증개축에 통상 1,400일(약 3년 10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 관련 자료는 별도 제출 약속

○ 수송 부문 예산 세부 내역, 부문별 감축 효과 분석 자료, 교육청 녹색건축물 본인증 소요 기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국주영은 의원 〉

○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진행 상황)** 집적화 단지 지정(2.4GW→0.4GW), 확산단지 추가 지정(1GW)에 따른 공사 시작 및 완료 계획 질의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2031년 완공 목표이며, 송전 계통 연결이 중요하다고 설명. 자재 발주는 3~4년 전에 이루어질 예정

○ **(RE100 산단 유치 경쟁 관련)** 군산과 도내 다른 시군 간의 유치 경쟁에 대한 도의 조율 방안 질의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지자체 간 장점 부각 경쟁이며, 도는 새만금 산단을 선도 모델로 구축 후 김제, 부안, 고창, 정읍 등으로 확대하는 두 단계 전략 추진

○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 태양광 설치)** 경북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농생명단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특구 조성 계획 유무 질의 및 선제적인 준비 촉구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재생에너지 정책과 환경적 가치 충돌을 언급하며,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국과 협의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

〈 염영선 의원 〉

○ **(RE100 산단 추진 현황 및 차별화 전략)**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만금 RE100 산단의 준비 상황과 울산, 전남 등 경쟁 시도와의 차별화 전략 질의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시기적으로 전북 서남권이 유리하다고 판단. 새만금 산단의 스마트

그린 산단 지정 노하우, 매립 완료된 부지 및 확장 사업을 통한 유휴부지 활용이 강점임을 강조. 현 대통령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

○ **(도내 시군 간 RE100 산단 유치 경쟁 조율)** 도내 시군 간의 다른 목소리에 대한 조율 필요성 질의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시군이 각자의 장점을 부각하는 중이며, 이는 오히려 지역 전체의 장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 단기 및 중장기 전략으로 조기 성과 창출과 확대를 병행할 것임을 강조

○ **(서남권 내륙 RE100 생산단지 구상 현황)** 새만금 외 내륙 지역의 RE100 생산단지 구상 및 진척도 질의

◘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부안(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고창(상하 해상풍력 활용), 정읍(육상풍력, 태양광 활용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서 개념적인 계획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용역이나 설계 단계는 아님

2-2-7. 제7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5. 11. 20.(목) 11: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9명
- 특위위원(7)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진형석·김동구·김정기·김성수·김슬지 위원
- 집 행 부(2) : 환경산림국장, 정책기획관 등

○ 안　　건 :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 제5차 업무보고 청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회의 내용

○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

소관부서		보 고 내 용	비 고
전북도	환경산림국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추진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보고 및 질의응답 (정책기획관 배석)
	참고	·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기반 구축 등	

□ 질의·답변 내용

〈 한정수 위원장 〉

○ **(시·군 기본계획점검 및 소통 필요)** 14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의문 제기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다양한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14개 시군은 인식 차이가 있어서 도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특히 도와 시군간 정책 연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임. 실례로 익산시의 경우 아직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언급함.

내년도 도 예산이 10조 원을 넘어서는데도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정책의지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환경산림국장) 올해 도는 점검을 했고, 시군은 내년 예정이지만 비공식적인 점검은 수시로 컨설팅을 하고 있음. 감축사업이 119건에 5,009억 원으로 의회 제출 예정임.

➡ (청정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RE100 참여기업 지원 등 3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

○ **(전북도 국정과제 탄소관련 사업)** 정책기획관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있는데,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전북도의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임.

우리 도의 전략 목표와 국정과제 간 연계성이 부족해 보이며, 전북도가 놓치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안은 없는지 의문임.

(자료요구)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26년도에 신규사업 반영 자료 보고, 그 중 탄소중립과 연관된 내용 자료 요구함.

➡ (정책기획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총 123개 중 25개 분야 74개 사업이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 다만 해당 과제에는 새만금, 기후와 탄소중립 부문, 에너지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서난이 의원 〉

○ 정부 기후에너지국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도도 내년 상반기에 국 개편 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김성수 의원 〉

○ 기본계획 수립 점검 실적 중 25년 중간점검 결과 지자체 온실가스 지원사업이 등 미달성 부문이 있음. 공모사업의 경우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산림국장) 공모했으나 선정이 안되어서 미달성으로 나타남. 내년에 다시 공모할 예정으로 폐지된 사업은 사업을 대체사업을 선정하겠음.

〈 김정기 의원 〉

○ 가축분뇨 공공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들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산림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산불예방에도 취약한 데 대책 수립이 필요함.

➡ (환경산림국장) 현재 증설 예정으로 수요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수종 개량으로 산불예방에도 힘쓸 예정임.

2-3. 간담회 및 보고회 개최

2-3-1. 제1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2. 12. 13.(화) 10:30
○ 장　　소 : 특별위원회 간담회장(3층)
○ 참석현황 : 11명
- 특위위원(11)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권요안·김동구·김성수·김슬지·김정기·염영선·윤정훈·
이수진·진형석 위원
○ 안　　건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

□ 간담회 내용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방법 논의
○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 간담회 결과

○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 선출은 호선 및 무기명투표로 진행
○ 서류 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2-3-2. 제2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2. 12. 28.(수) 10:00
○ 장　　소 : 특별위원회 간담회장(3층)
○ 참석현황 : 12명
- 특위위원(5)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김동구·염영선·이수진 위원
○ 안　　건 : 전라북도 탄소중립 정책 및 관련 사업 업무보고 청취, 사전 논의 및 의견수렴 등

□ 간담회 내용

○ 전라북도 탄소중립 정책 및 관련 사업 업무보고 청취 관련 주요 질의내용 사전 논의
○ 기타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 간담회 결과

○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 활동계획서 준비
- 기타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등

2-3-3. 제3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3. 2. 9.(목)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간담회장(3층)

○ 참석현황 : 9명

- 특위위원(9)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김동구·김성수·김슬지·김정기·염영선·이수진·진형석 위원

○ 안　　건 :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사전 의견수렴 등

□ 간담회 내용

○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사전 의견수렴 및 논의

○ 기타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 간담회 결과

○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 연석회의 개최 계획
  · 위원회 역할 및 관련 활동 향후 계획 협의
  · 특위 위원(11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20명)

2-3-4. 제4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3. 5. 24.(수)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간담회장(3층)
○ 참석현황 : 9명
- 특위위원(9)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김동구·김성수·김슬지·김정기·염영선·이수진·진형석 위원
○ 안　　건 : 6월 회기 중 집행부 면담 및 기구 추가 건의 등

□ 간담회 내용

○ 6월 회기 중 집행부 면담 요구 협의
○ 도지사 직속 탄소중립추진단(가칭) 구성 요구
○ 지자체 ESG 가치 제고를 위한 전라북도-도의회 MOU 체결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10대 과제 발굴
○ 기타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등

□ 간담회 결과

○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 집행부 면담 추진 : 6월 회기 중
  · 탄소중립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 기구 설립 요구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조속한 수립 요구
  · 전라북도-도의회 MOU 체결 및 10대 과제 발굴 요구

2-3-5. 제5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3. 6. 19.(월) 18:30
○ 장　　소 : 인근 식당
○ 참석현황 : 14명
- 특위위원(11) : 한정수 위원장 등 특위 위원 11명
- 집 행 부(3) : 행정부지사, 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정책과장

○ 내　　용 : 전라북도 탄소중립 정책 관련 소통과 간담 등

□ 간담회 내용(탄소중립 특위 요구사항)

○ **도지사 직속 탄소중립추진단(가칭) 구성**
-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이 가장 시급하고, 신재생에너지·수소 산업 등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임.
- 또한, 일반행정·일자리·농업·환경·교통·건설 분야 등 도정 전반에 탄소중립이 기본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목표 설정·이행 평가 등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함.

○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
- 탄소중립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추진 필요
-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민 전체가 수용할 만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대한 시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반영 추진

○ **지자체 ESG 가치 제고를 위한 전라북도-도의회 MOU 체결**

-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ESG 연계 시책 발굴·실행 및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와 도의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필요**

* 17개시도 광역지자체 ESG평가 전북B등급 7위 (ESG행복경제연구소, 2023.5.15.)

○ **전라북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10대과제 발굴**

- 국가계획을 전제로 한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별개로 전북의 여건·특성, 탄소중립 실행 의지를 반영한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과제 발굴 및 이행 필요

* 전북 탄소중립 10대과제 발굴 방향 토론회 개최 (2023.7.24(월)10:00, 도의회 세미나실)

2-3-6. 제6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3. 10. 20.(금)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간담회장(3층)
○ 참석현황 : 10명
- 특위위원(10명)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권요안·김동구·김성수·김슬지·김정기·염영선·이수진·진형석 위원

○ 안　　건 : 특위 활동기간 연장 협의 등

□ 간담회 내용

○ 특위 활동기간(2022. 12. 13. ~ 2023. 12. 12.) 연장에 대한 협의

☞ 활동기간 1년 연장(2024. 12. 12일 까지) 의견

※ 현 11명 특위 위원 활동 지속

- 연장 사유

① 2024년 14개 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점검 필요

②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 신설 또는 사업추진 부서를 기획조정실로 격상시켜 탄소중립 실행력과 조직력 강화 필요

③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점검, 심의)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간담회 결과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공동 발의 추진

○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 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 인벤토리 포럼 개최(11월 중)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회(12월 중)

2-3-7. 제1차 보고회

보 고 회 개 요

○ 일 시 : 2023. 12. 28.(목) 14:00

○ 장 소 :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2층)

○ 참석현황 : 20여 명

- 특위위원(6)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부위원장, 김동구·김성수·이수진·진형석 위원
- 집 행 부(7) : 기업유치지원실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산업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수렴

□ 보고 내용

○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

□ 질의·답변 내용

〈 한정수 위원장 〉

○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며, 이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 없음.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고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잘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14개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현황은?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전주시는 설립되었고, 익산과 부안이 준비중에 있음. 센터가 없는 시군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머지 시군도 점진적으로 탄소중립센터가 설립되도록 지원 하겠음. 시군은 주로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시군을 지원 하겠음.

○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 내용이 부족함.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기본계획은 방향성 제시를 위해 수립된 것이고, 14개 시군은 시군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임.

○ RE100, 해상풍력 등 이행계획과 실천전략이 별도로 나와야 함.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함.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행계획은 별도로 있으며, 예산 내용

등은 이행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고, 추후 별도 보고 하겠음. 전력수급과 송배전선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방향성 제시로만 기본계획에 수록했음. 방향성을 시군에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 진형석 위원 〉

○ 탄소배출권을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지원방안은 있는지?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전북TP에서 내년부터 지원 예정임. 지자체가 먼저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음. 앞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분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음.

〈 농생명축산식품국장 〉

○ 농업분야가 전북이 14%라고 하는데, 전국의 경우 농업 GDP와 비슷하게 7%정도인데,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전북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것으로 전북은 산업부문 비중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이 높게 나타난 것임.\

2-3-8. 제7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4. 1. 25.(목) 13: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3층)
○ 참석현황 : 12명
- 특위위원(8명) : 한정수 위원장, 김동구·김성수·김슬지·김정기·윤정훈·이수진·진형석 위원
- 집 행 부(4명) : 기후환경과장 등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안　　건
-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보고

□ 간담회 내용

○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추진 관련 보고**
- 보고자 : 기후환경정책과장
- 답변자 :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질의 답변 및 요구사항**

<질의 답변>

- (김성수 위원) 저탄소 한우 사업이 탄소중립에 반영되었는지?
  ➡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음.
- (김정기 위원)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진척이 없어 보임.
  ➡ 기본계획 수립 후 이행평가 마련하여 추진 예정
- (김정기 위원)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이는 데 대책은?
  ➡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지자체가 앞장서서 추진하겠음.
- (김정기 위원)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가 고가인데 대책이 필요함
  ➡ 정부에 건의하겠음.

- (한정수 위원장)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고, 추진체계에서 행정이 총괄하는 것이 아닌 **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센터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요구사항>

1.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권한 격상**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2.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14개 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 적극 지원**
3.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없는 **13개 시군에 센터가 설립**되도록 도비 지원 등 **적극 지원**

2-3-9. 제8차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4. 12. 13.(금) 11:30
○ 장　　소 : 인근 식당
○ 참석현황 : 9명
- 특위위원(6명) :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진형석·염영선·김정기·김슬지 위원
- 집 행 부(3명) : 탄소중립정책과장, 팀장, 주무관

○ 안　　건
-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상황 등 보고

□ 간담회 내용

○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추진 관련 보고**
- 보고자 : 탄소중립정책과장

- 내 용

  · 2025년 탄소중립 추진계획: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2025 탄소중립기본계획 과제 이행, 탄소중립 활성화 정책 추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추진

  ·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

2-4. 연석회의 개최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3. 3. 7.(화) 11:30

○ 장　　소 : 고궁담

○ 참석현황 : 17명

- 특위위원(10) : 한정수 위원장 등 특위 위원 10명
- 집 행 부(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등 외부위원 5명, 당연직* 1명)

* 환경녹지국장 / 배석(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내　　용 : 양 위원회 역할 및 관련 활동 향후 계획 협의 등

□ 협의 내용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행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 다짐

○ 2023. 3월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계획과 연계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양 위원회가 아이디어를 모아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협력

< 한정수 위원장 >

○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서 추진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서로 논의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나아가기를 바람.

< 임성진 위원장 >

○ 2022. 10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막중한 책무를 갖고 활동을 준비 중으로 전북도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북도가 가장 먼저 미래를 여는데 협력해 나갈 것임.

2-5. 토론회·포럼 등 개최

2-5-1. 정책 토론회

개 요

○ 일 시 : 2023. 2. 23.(목) 14:00~16:40
○ 장 소 :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2층)
○ 참석현황 : 100여명(의장, 도의원, 행정부지사, 전북도당 관계자,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에 대한 발표 및 토론 등
○ 공동주최 :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 주요 내용

○ 주 제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탄소중립에서 길을 찾자!**

○ **주제발표**

(발표1) 더 특별하고, 더 새로워질 전북특별자치도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

(발표2) 2050탄소중립을 위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 현황 및 특례발굴 방안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토　　론

(좌장) **한정수** 위원장

(토론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향점과 전라북도의 고민 및 해결방안

(**문상진** 두산퓨얼셀 본부장)

(토론2) 전라북도 탄소중립 이제는 행동해야 할 시간

(**이중희**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3) 탄소중립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토론4)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략적 대응 필요성

(**진형석** 특위 위원)

□ 토론회 결과

○ 발제 및 토론

구 분		주 요 내 용
좌장	**한정수** 위원장	· 개인보다는 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적극 참여 ·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공 필요
주제발표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	·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탄소중립형 특례 발굴 위해 노력 · 전라북도가 탄소배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연구
주제발표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강원도·제주도의 특례 사례를 비교 · 분석하여 현실적인 방법 제시 필요 ·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탄소중립 도시 특례 발굴 필요
토론	**문상진** 두산퓨얼셀 본부장	· 전북 강점 산업인 수소·전기차 산업과 연계하여 수소·전기·열을 동시에 생산·공급할 수 있는 트라이젠(Trigen)연료전지시스템 도입 연구 필요 · 또한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 특례 필요
토론	**이중희** 전북대학교 교수	· 동부권(진안 등)의 우수한 산림자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용 · 도민 · 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의 방법 필요
토론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전라북도와 도민이 혜택을 받게 됨 · 전북특별자치도를 견인할 주체로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요구
토론	**진형석** 특위위원	· 전라북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외부 감축사업 발굴 및 상쇄배출권 인증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참가자 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박정규 도의회 의원	· 에너지공동체 마을 등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다른 마을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탄소중립을 위한 숲가치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최영국 전북탄소중립 경제협회	· 전기배터리 장착하여 중고차를 중고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나주사례) · 우리도는 중장비, 특장차, 농기계산업이 강점이므로 이에 대한 전기차 전환 사업 발굴 필요(재제조산업)
청중	· 전라북도가 탄소중립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문의

2-5-2. 전문가 포럼

개 요

○ 일 시 : 2023. 4. 10.(월) 10:00~12:00

○ 장 소 :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1층)

○ 참석현황 : 50여 명

- 의장, 특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IPCC* 6차 보고서 분석을 통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대응

*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 공동주최 :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전북·전주·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주요 내용

○ 주 제 : IPCC 6차 보고서 분석을 통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대응

○ 강 의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IPCC 6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국가 대응 전략

○ 발 표 :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 방안

□ 포럼 결과

○ 발제 및 토론

구 분		주 요 내 용
강의	**이유진** 녹색전환 연구소 부소장	**- IPCC 제6차 보고서 주요 내용** · 탄소감축하지 못하면 극한 고온, 가뭄, 호우 등 증가 · 위험성 평가와 지역별 적응 대책 수립 필요 **-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차기 정부에 감축 부담 전가 · 산업부문 감축량 줄어(14.5%→11.6%) ·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필요성 **- 지역탄소중립 정책의 필요성** ·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이행점검 체계 확립 · 난방비 지급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연결하기 · 태양광발전 에너지 비용 저감과 복지 연계 ·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 혁신
발표	**장남정** 전북연구원 탄소중립지원 센터장	**-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2022)**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 용역 ·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 2만5천톤(1991년 대비 92.5% 증가) · 전북은 새만금, 서해안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활용 · 동부지역에 풍부한 산림 · 신재생, 전기차, 수소 등 친환경녹색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라북도 친환경 정책개발** ·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너지 전환선도정책연계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체감정책 추진 · 이행평가 강화를 위한 추진력 확보

○ 참가자 의견

구분	주 요 내 용
전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 다하는 것이 필요함
완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앙정부 감축률보다 전라북도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감축률을 높게 책정하여 목표 미달성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예산 등)에서 불리함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 새만금 생산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 → 장기적으로 연구 · 고민할 필요성은 있지만, 중앙정부나 한전 등과 협의가 필요함

○ 향후 계획

– 포럼내용(의견) 등이 도정에 협력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공유

–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관련 정부와 지자체 동향파악 지속

2-5-3. 10대 과제 발굴 토론회

개 요

○ 일 시 : 2023. 7. 24.(월) 10:00~12:00

○ 장 소 : 전라북도청 중회의실2(3층)

○ 참석현황 : 80여명(특위위원, 행정부지사,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 시민단체 등)

○ 주요내용 :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 방향 토론

○ 주 최 :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 주요 내용

○ 주　　제 :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 주제발표

(발표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이주헌** (사)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발표2)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황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토　　론

(좌 장) **한정수** 위원장

(토론1)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 방향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토론2) 탄소감축 사업 아이디어 (**박종연**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3) 건물 탈탄소화로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전북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장)

(토론4)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 방향

(**서난이** 특위 부위원장)

□ 토론회 결과

○ 발제 및 토론

구 분		주 요 내 용
좌장	**한정수** 위원장	· 전북이 탄수중립에서 앞서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의견수렴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는 장으로 마련 · 정치, 행정, 시민단체의 과제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지표관리 차원이 아닌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과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14개 시군 담당관 선정·확인하여 **시군 담당관과 도 기본계획 공유 및 지자체와 의견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리할 필요
주제발	**이주헌** (사)넥스트 수석정책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북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3%) - 전북의 경우 군산시가 전북 배출량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표	전문위원	·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도의 탄소중립을 위해 주목할 지점 언급** - 신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황파악과 지원대책 마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연구 필요
	장남정 전북탄소중립 지원센터 장	·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주요 수정사항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변경 사항 설명 · 미래배출량 전망과 감축 인벤토리 기준안을 마련하고 2030 목표설정 시나리오 검토 · 부문별 감축사업 목록 수정사항 설명
지정토론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민주화를 위해 에너지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과 권한이양**이 필요 · **특별자치도의 흐름과 계획 및 내용을 탄소중립과 통합**해야 함. · 지방정부가 선도적 역할 수행,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건물부문에 대한 인벤토리가 포함되었으면 함 · **탄녹위의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기존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박종연 전북대학교 교수	·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 - 생태환경,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탄소중립 시점이 늦춰질수록 수십 배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빠른 탄소중립을 이뤄야 함. · **개별 가구 탄소중립 지원 체계 확대** - 개별가구에 에너지 저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 · **대학 캠퍼스 탄소 감축 의무화** - 에너지 절약에 따른 에코 마일리지 제도 운영, 대학 평가항목으로 추가
	최우순 전주시 에너지센터장	· 지구평균온도 상승 1.5도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위기 시계가 5년 364일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음. · **건물 탈탄소화로 온실가스 관리하는 전북** - 건물 분야의 감축 계획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음. -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으로 온실가스 감축 - 광역지자체에서 정책과 예산 마련에 힘써주길 바람.
	서난이 특위 부위원장	·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고 지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 ·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에너지 절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탄소중립**

구 분		주 요 내 용
		저감 농법, 축산기술 개발 중점 추진 - 에너지 자립마을이 태양광 설치, LED지원 등으로 활용이 낮아 독일의 친환경공동체 에너지 단지 조성이 에너지를 판매할 정도의 공동체 마을 정책 지원 필요 - 지속가능한 도심개발을 위해 도시숲 조성 필요 - 교통관련 친환경 차량보급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기 전용차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질의·답변

구분	주 요 내 용
시민행동21	· **시·군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 시군 공동협력 계획과 의견수렴 예정 · 시군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차량 감소를 위해 출퇴근용 차량 도입**이 필요(광역교통공사의 역할로 지역연계 시스템 도입 요망) →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중 실천을 위해 기반과 교육 포함
전주지속협	· **정치적으로 민주당, 중앙부처 등과 연계하여 해결할 문제** - 송배전망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 요구 → 국회와 한전이 풀어야할 숙제, 지자체의 고민과 노력 지속 - 건물 지원과 규제책에 대한 법규 제·개정되어야 함 → 법 개정을 위한 시간 필요(시행령 개정 진행 중) ·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태양광 설치를 규모있는 건물·주차장(공공, 학교, 공동주택) 부지 활용** 방안 마련(민간출자 등) → 전라북도 에너지공단 설립 필요성 도정질의했고, 도 추진 중.
전주시 기후변화 담당 공무원	· 태양광 발전 등 민간 임대료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안 필요하고, 지역의 수입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상황임. · **업무추진 체계기반을 마련하고 동력이 필요** → 기본계획에 담당자들 업무 체계 구축하고 있음 · **탄소중립 인지 예산제 도입 필요** → 5분 발언으로 2024년 시행 제안 요구

2-5-4.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토론회

개 요

○ 일 시 : 2025. 2. 4.(화) 14:00~16:00
○ 장 소 :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익산시 선화로 836-2)
○ 참석현황 : 150여 명(특위위원, 전북도당·익산시 탄소중립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등
○ 주 최 :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 주요 내용

○ 주 제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주제발표

(발표1) 익산시 2050 탄소중립 추진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발표2)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황 및 이슈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 토 론

(좌 장) **한정수** 위원장

(토론1) 익산시 탄소중립 현주소와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

(**김진규** 익산시의회 의원)

(토론2)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와 활성화 방안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토론3) 탄소중립지원센터 이슈와 관련한 제언

(**이진홍** 익산시 희망연대 사무국장)

□ 토론회 결과

○ 발제 및 토론

구 분		주 요 내 용
좌장	**한정수** 위원장	· 탄소중립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 환경이 아니라 산업·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 **전략적 목표설정**을 위한 고민없이 정부 추진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 지적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고, 행정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닌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 구축 필요 ·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한 기본교육** 필요
주제발표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 환경국장	· **익산시 2050 탄소중립 추진** - 익산시 일반현황 분석(인구, 주택, 수송, 에너지 등) - 탄소중립 주요 추진사업 설명(건물, 수송, 자원순환, 농축산, 흡수원) - 익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제언) 탄소포인트제와 흡수원 확보를 위한 지속 노력, 센터의 위상 확립을 위해 사업 진행,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 의견 반영
	장남정 전북탄소중립 지원센터장	·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황 및 이슈** - 광역 및 기초 센터 지정 현황과 주요 사업 - 전북 센터 운영 현황(정책지원, 연구·통계관리, 문화조성, 대내외 협력, 특화사업, 기타 지원활동) -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방향 (제언) 배출권 거래제 지속 추진, 행정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지정토론	**김진규** 익산시의회 위원	· **탄소중립을 위한 익산시와 탄소중립센터의 역할** - 익산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예산 확보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을 대비해야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다양한 민간 주체와 협력**하여 정책 평가와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탄소포인트 제도를 확대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 -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산업별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실천을 유도해야 -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심 녹지 보호 및 조성**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모색

구 분		주 요 내 용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 센터장	· **센터의 위상과 역할 정립 필요** - 센터가 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머리 역할을 할 것인지 손발 역할을 할 것인지** 둘 다 맡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 익산에 대기업이 유치된다면 탄소중립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 - 센터의 위상에 따라 업무 범위와 권한이 달라지며, 연구사업과 실행사업 간 균형이 필요 · **센터 운영 제언** - **인력 확보와 고용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 **연구·행정 인력을 분리**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 예산 운영과 인건비 비율을 고려한 **전략적 인력 배치**가 중요하며, 통합 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이진홍 익산시 희망연대 사무국장	·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방식** - 익산시는 2025년 전북 시군 중 두 번째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영 방식과 역할**이 중요한 과제 - 조례에 따라 센터는 직영 운영 또는 기관·단체 지정을 통해 운영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연구·정책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협력, 교육·홍보, 시민 실천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 - **탄소중립 총괄부서를 신설해 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모색 - 익산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단순한 중간지원조직을 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

○ 질의·답변

구분	주 요 내 용
미상	·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지 의문이며, 산업과 농업 관련해서 산자부와 농림부 등 어떻게 협력하고,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 선진국이 환경관련 부서가 추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총괄하게 됨. 현재는 지자체 총괄로 행정부서와 지속 협력

구분	주 요 내 용
	→ 환경부서가 탄소중립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어 상위 조직 구축과 부서 간 협력체계로 업무추진 필요
이수진 (탄소특위 위원)	· 환경 문제는 생존과 관련되었으며, 산업과도 연관된 것으로 개발 논리의 예전과 상황이 바뀌었는데 환경부가 추진하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알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음.
기자 (**일보)	· 익산시장이나 부시장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가능성은? → 추후 검토가 필요함. · 센터 운영 방식은? → 공모를 통한 지정이 예상됨. 익산 지역에 지정할 역량이 있는 기관이 있는지는 의문임.

2-5-5. 탄소중립 기획 포럼(1차)

개 요

○ 일 시 : 2025. 3. 20.(목) 14:00~16:00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

○ 참석현황 : 80여 명(특위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전북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안 등
(기후 대응 기금 활용 방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

○ 주최/주관 : JBS 탄소중립 포럼*/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전북행동,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 주요 내용

○ 주 제 : 전북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안 토론회

○ 주제발표

(발표1)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

(발표2) 탄소중립과 예산 운용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

○ 토　　론

(좌 장) **한정수** 위원장

(토론1)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2)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토론3) **라　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 토론회 결과

○ 발제 및 토론

구 분		주 요 내 용
좌장	**한정수** 위원장	· 전북도의 대선 공약 비전 프로젝트가 대부분 SOC 건설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전북 발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전북도는 탄소 배출량이 적어 탄소중립에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이를 활용한 전략이 부족 · **정부 지원 기금 규모도 미흡**하며, 단순히 타지역 수준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며,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자체장은 조직 개편과 예산 편성을 통해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만, 현재 이뤄지지 않음. 이에 따라 탄소중립 추진단을 신설하고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음. ·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최소 50% 이상을 기후 대응 기금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주제발	**이성현** 나라살림 연구소	**<주제: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1.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표	기획실장	·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을 추진 중. · 탄소배출 억제 프로그램으로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등을 운영하지만,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과 효과적인 감축사업 발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감축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배출사업 평가 부재로 인해 신뢰성이 낮고 정책 연계성이 부족**함. **2. 기후대응기금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문제점** · 기후대응기금은 재원 조달이 불안정하고, 기존 사업을 단순히 집합한 형태여서 **차별성이 부족하며, 정책적 목표가 모호**함.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감축사업 예산이 확대되지 않고, **예산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도 미흡**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기후대응기금 및 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한 상황. **3. 개선방안** · **안정적 재원 확보**: 탄소세 도입, 배출권 매각 등 장기적 수입 구조 마련. · **전략적 사업 확대**: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융자 프로그램 개발. · **성과관리 및 제도 개선**: 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배출사업까지 포함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개편. ·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과정에서 지역·산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별도 지원기금 설립 검토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정책 과장	**<주제: 탄소중립 관련 예산운용>** **1. 탄소중립과 예산운용 개요** ·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2050년 탄소중립, 2030년 40% 감축)가 강조됨. · 정부 및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 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중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및 기후대응기금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됨. ·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13개 시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 중.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및 지자체 예산에서 감축사업을 분류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 총 10조 7,279억 원 중 98.8%가 감축예산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감축사업 비중은 4.5%로 낮음. · 배출사업과 중립사업 비중이 높고,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 확대 필요. · 법적 기반 부족(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미개정), 표준화된 지침 부재 등으로 실효성이 제한적. **3. 기후대응기금 운용 및 개선 방향** · 정부 및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48.6억 원, 2025년 기준)하여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에 투자. · 하지만 예산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국가 재정 지원 필요)이 요구됨. · 향후 조성액을 2035년까지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함.
지정토론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1. 발제에 대한 토론**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단순 행정 부담이 아닌 실질적 탄소중립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함. · 예산 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및 정치적 압력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역 특화형 사업 추진을 위한 독립적 재원이 필요함. **2. 주요 난관 - 중앙정부의 재정계획 문제점** ·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 지역의 동기부여, ② 계획의 실질성과 합리성, ③ 중앙정부의 지원, ④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정계획이 부실하여 목표 대비 실제 예산 집행이 크게 미달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후재정 확대가 어려운 상황. **3. 전라북도 탄소중립기본계획 재정계획** · 10년간 총 4.4조 원(국비 2.1조, 지방비 1.4조, 민간 0.9조) 투입 계획이지만, 국제적 기준(GDP 대비 5% 투자) 대비 부족함. · 타 지자체 대비 건물 부문 감축 예산이 현저히 낮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예산 제약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원 조달 모델(녹색채권, 공공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도입이 필요함.

구 분		주 요 내 용
		4.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 중앙정부: 하향식 계획구조 개선, 기후재정 삭감 방지, 지자체 의견 반영 강화, 탄소흡수원(숲·갯벌) 기반 교부금 배분 제도 검토. · 지자체: 기후재정계획 수립, 거시경제 영향 분석 포함,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대응 투자 확대 필요. · 전북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확대, 지자체 독자적 재원 확보, 그리고 재정계획의 실질적 이행이 필수적임. →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이 지방 정부의 재정 계획과 탄소 중립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지방 교부금의 부족으로 지방 정부가 자립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크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 탄소중립 기여 도시를 위한 특별 교부금 제안** · 전북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탄소 배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지자체에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여 지역에서 더 친환경적인 개발과 생활을 유도해야 함 **2. 의회의 역할 강화** · 의회가 탄소중립 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삭감하는 권한을 강화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의회가 기후 예산 특위를 설립하고, 예산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야 함 **3.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 · 공무원들이 예산을 계획할 때 탄소 감축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함. 1억 원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탄소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4. 기후 대응 기금의 활용** · 기존 기후 대응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함. 기후 대응 기금을 확대하고, 일부는 금융화하여 융자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기후 대응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사업들에 필요한 금융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5. 금융을 통한 전환 지원** · 민간에서 추진하는 기후 전환 사업에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융 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자가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상품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구 분		주 요 내 용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1.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 ·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도 전입금, 환경관련 징수비용 교부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됨. ·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큼. ·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2. 기금 운용 방향** 가. 기금 용도 명확화 필요 ·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되어야 하며, 목적성을 확립해야 함. · 사업 유형 - 시급 사업: 단기적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 마중물 사업: 사업 초기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선제적 지원 - 화룡점정 사업: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지원 (특히 R&D 분야) 나. 체계적인 기금 집행 필요 · R&D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담당하고, 기술 성숙도가 높은 R&D 사업은 기금으로 지원 ·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질의·답변

구분	주 요 내 용
이승환 전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 기후 변화 대응의 어려움과 기초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설명 · 특히 **전주시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서를 작성하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로, 210개 사업을 예산서로 묶어 400페이지 분량을 작성했다고 언급 ·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심의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반영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금은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원**되어야 하며, 기후대금을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거나 **지자체가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야 함.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년 동안 전북도의 예산을 분석하며 자립도가 낮고,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았음 · 특히, 현재 전북도의 예산에서 환경 관련 지원은 기후 대응 기금 외에는 거의 없으며, **탄소중립 2035년 목표에 대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함 · 또한, 전북도는 환경 정책에서 기후 대응 예산이 부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명확한 방향이 부족한 상황 · 경기도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파트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아직 그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구분	주 요 내 용
	· 특히,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부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예산이 부족하지만 **전북도의 흡수원과 훼손지 복원을 통해 기후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 · 이는 다른 지자체가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전북도는 흡수원 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김정기 탄소특위 위원	·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 · 특히, 다용도 용기 활용 정책이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꿀벌 보호와 밀원수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고,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함 ·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

2-5-6. 탄소중립 기획 포럼(2차)

개 요

○ 일 시 : 2025. 4. 3.(목) 10:00~12:00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2층)

○ 참석현황 : 70여 명(특위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 주최/주관 : JBS 탄소중립 포럼*/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전북행동,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 주요 내용

○ 주제발표

(발표1) 호남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혁 과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발표2) 에너지3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대응 과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토　　론

(좌 장) **임성진**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토론1)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토론2)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토론3) **염영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 토론회 결과

○ 발제 및 토론

구 분		주 요 내 용
좌장	**임성진**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 원회 위원장	· 송전망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해상풍력 특허 문제가 장애로 작용. 재생에너지 전환 취지에 맞는 법 개정 필요. · 탄소중립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 실행 부족. 중도층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정책 접근 필요 · 관련 법안이 난립하여 거버넌스 혼란 초래. 탄소중립 기본법 중심으로 법체계 정비해야 함 · 한전 주도 어려워 국가 차원의 개입 필요. 관련 법안 발의 논의 중, 적극 활용 검토해야 함. · 중앙-지역 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법·제도 정비 지속 추진 · 한전 독점 문제를 1997년부터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같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 독일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역 발전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지만, 한국은 형식적 계획에 그침. · 탄소 중립은 미래 변화 전략이지만, 현재 도 차원에서는 특정 부서만 담당하며 협업이 부족함.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 전체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추진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주제발표	**석광훈** 에너지전환 포럼 전문위원	**<주제: 호남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혁 과제>** **1.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현실** · AI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 전망이 있지만, 닷컴버블과 유사한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음. · AI 반도체 혁신으로 전력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폭이 제한될 수 있음. · 수도권 중심의 전력망 확충 정책이 진행 중이나, 실질적인 산업구조 개편 필요. **2. 국내 전력산업의 문제와 대안** · 국내 전력업계는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명분으로 원전·화력발전 확충을 주장하지만, 효율적 대응책이 부족. · 수도권 전력문제는 송전선 부족이 아니라 높은 송전 의존도가 원인으로, 분산전원 확대가 필요. · 태양광과 원전 간 충돌 문제 발생: 원전 정지 시 전력망 안정성이 저하되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빈도가 증가. **3. 해외 사례: 전력시장 혁신** · 스웨덴: 지역·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해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 지역 산업 활성화 유도. · 영국: IT기업(옥토퍼스 에너지)의 전력시장 진입으로 AI 기반 유연성 확보, 배전망 최적화, 소비자 중심 변동형 요금제 운영. **4. 호남 재생에너지의 미래와 정책 과제** · 한전 독점체제로 인해 전력망 확충이 특정 전원(원전·석탄)에 유리하게 작용, 분산전원 성장이 저해됨. · 지역별 차등요금제, 송전사업자 독립, 자율요금제 도입 등으로 전력시장 개혁 필요. · 해외 사례를 참고해 AI·IT 기반 전력망 최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함. **<결론>** ·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전력망 확충이 아니라 전력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전력거래 시스템이 요구됨.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제: 에너지3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대응 과제>** **1. 에너지 3법 관련 전북자치도 주요 동향** · 방사선폐기물 관리: 전북(고창·부안)은 한빛원전과 관련한 방사선폐기물이 존재하며, 해당 법안은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구 분		주 요 내 용
		· 전력망 문제: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지만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이를 개선할 가능성. · 해상풍력 개발: 서남권 해상풍력(부안·고창), 군산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 **2. 에너지 3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가.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특별법 ·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영구처분시설 구축이 필요. · 전북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인접 원전(한빛)의 저장시설 문제 해결이 중요. 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망 구축 필요성을 해결. · 전북은 이 법안으로 해상풍력 발전 전력의 송전망 문제 해결 가능. 다.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 ·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여 보급 촉진. · 전북 해상풍력 사업(서남권·군산)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3. 전북자치도의 향후 과제** · 주민 수용성 확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및 수익 공유 모델 개발. · 전력망 확충 및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필요. · 공공주도 해상풍력 육성: 정부 및 지방공기업 주도로 해상풍력 산업 및 관련 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연계 산업 발전: 전북을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정토론	**이주헌** (사)넥스트수석정책전문위원	· 국가 차원의 제도를 다루는 법으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님. 기존 제도들을 대폭 변경하며 특례와 권한을 부여한 강력한 법안이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함. 법 조항에 지역 특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자체가 얼마나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 · 해상풍력발전특별법(해풍법): 전북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과 어민과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했다면 긍정적 영향 예상. 반면, 거버넌스 부족 시 새로운 도전 과제로 작용 가능. · 전력망특별법(망법): 기존 법 체계에서도 국가 기관망 구축이 어려웠는데, 특별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 법이 거버넌스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약화시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구 분		주 요 내 용
		· 에너지 관련 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법안 대응보다는 전북도의 탄소중립 계획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우선 수립해야 함. · 망법 시행령 제정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전북도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존 법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함. · 해풍법의 경우, 군산의 항만 인프라 활용과 전북 제조업과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함. · 법안이 너무 많아지는 입법 만능주의 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이 국회에 법안 간 정합성과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함.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국가 전력망 특별법 등 추진 시, 전북도의 사전 대응 미흡. 중앙정부 주도 정책에 수동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추진, 차등 보상은 주민 갈등 유발. 해상풍력 발전과 송전망 구축의 불균형 문제 해결 필요. · 전력망 · 해상풍력 · 분산에너지 법을 연계한 정책 수립 필요. · 지역별 차등 요금제 및 인센티브 확대. 한빛 원전 관련 재생에너지 우선 접수 요구. 재생에너지 특구 지정 및 체계적 입지 계획 수립. **〈결론〉** ·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중앙정부 법안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정책적 주도권 확보 필요. · 전력망,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특구 지정 등 종합적인 전략 마련 및 실행이 시급함.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 수소과장	· 과거에도 수도권 발전소가 아닌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했으며, 경과지 역할을 해왔음. 기존 원전 송전 때는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재생에너지 송전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해상풍력법(해풍법)과 관련해 지역 갈등 해결은 여전히 지자체의 역할로 남음. 집적단지를 통해 주민 이익 환원 방안을 모색 중이며, 해풍법이 주민 이익을 보장하면 이를 활용할 계획.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 갈등 조정에 의미가 있지만, 기존 법으로도 조정 가능함. ·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문제에 대한 행정적 해결책 모색 필요.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 고민. 지역 내 재생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발전량 예측 및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예정.
	염영선 도의회 탄소중립 특별 위원회 위원장	· 전북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환경권, 관광권, 지상권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3법' 이 아니라 '에너지 약법' 이 될 수도 있음 · 국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 전북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질의·답변

구분	주 요 내 용
유남희 (사)전북사회 경제포럼 이사장	· 현재 기술적 수준에서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송전망에 접속하고, 화력 및 원자력 에너지를 출력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은 가능하지만 송전망 지원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 전력망 운영 규칙을 심의할 전문 규제 기구(예: 영국의 2천 명 규모 규제 기관)가 필요하나, 한국은 전기위원회가 있으나 자문기구 수준에 불과함. · 수도권 송전선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높일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30%**가 외부 의존적이므로, 송전선로의 출력 4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여 광역 정전 방지 중이고, 해결책은 수도권 내 대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것임. AI 및 IT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배전망 수준에서는 AI 활용 가능 (예: 옥토퍼스 에너지의 요금제 기반 수요 관리) · 현재 한전의 독점이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의 핵심 중 하나, 한전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능한가? → OECD 국가들이 시행한 **4대 개혁 패키지(경쟁 도입, 판매 요금 자율화, 망 분리 등)**를 정치권이 외면 중으로 소비자 단체 및 광역 지자체가 개혁 요구를 조직화해야 함. 배전망 경쟁 도입 시 광역 지자체가 배전 사업을 인수하거나, 혁신 기업 위탁 운영이 가능함.
강소영 전주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민주당 차원의 토론회 제안: 분산에너지법, 전력망 관련 법안들이 기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함. 이러한 법령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중앙 차원의 토론회 개최 필요. 도 차원에서 논의해도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 석광훈 위원에 대한 질문: 현재 한전의 독점 체제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전북·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라는 식으로 정책이 운영되는 듯한 느낌을 받음. 전북·호남·제주를 하나의 에너지 공동체로 묶고, 한전으로부터 독립하여 요금제와 전력거래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제주도에서 마이너스 요금제 도입 → 잉여 전력을 낮은 가격에 공급, 수요 촉진. 출력 제한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전국 확대 예정이지만, 경쟁 체제 도입은 아직 요원함

2-5-7. 탄소중립 포럼

개 요

○ 일 시 : 2025. 7. 30.(수) 16:00~18:00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세미나실

○ 참석현황 : 50여 명(특위위원, JBS 탄소중립포럼,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 주최/주관 :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JBS 탄소중립포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 전북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탄소중립전북행동

□ 주요 내용

○ 주제발표

(발표1) 경기도 탄소중립과 RE100 정책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발표2)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정책 (**이현서** 전북도 정책기획관)

○ 토 론

(좌 장) **유남희**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1)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토론2)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

(토론3)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 포럼 결과

○ 발제 및 토론

구 분		주 요 내 용
좌장	**유남희** 전북대 교수	○ **(협력 제안)**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는, 경기에서 해온 사례를 바탕으로 정례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토론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바람을 밝힘 - 경기도와 전북은 '체급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주제발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주제: 경기 RE100 추진 현황>** **1. RE100의 중요성 및 경기도의 목표** - RE100(재생에너지 100%)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 캠페인에서 무역 장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29개 RE100 기업 중 다수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음 - 경기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에도 불구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목표를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RE100 투자 환경을 개선 **2. RE100 추진 전략 및 성과** - 경기도는 공공 RE100, 공유부지 RE100, 기업 RE100, 도민 RE100, 산업 RE100 등 다양한 분야에서 RE100을 선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의 신규 태양광 설치 규모는 약 1,045MW에 달하며, 특히 최근 2년간 산업단지 태양광 인허가 실적이 이전 10년의 실적을 초과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 증가율을 보임 **3. 공공 및 공유 부지 RE100 추진**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지표에 이를 반영 - 고속도로 나들목, 공영차고지, 방음터널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도민의 햇빛 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3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도민참여형 발전소 50개소를 추진 중 **4. 산업단지 및 도민 참여형 RE100** -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공급의 메카로 만들고자 신규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존 산업단지에는 인센티브 제공 및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RE100 전환을 유도 -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행동을 독려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2030년까지 10만 가구의 전력 자립을 목표로 'RE100 마을'을 조성하여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

구 분		주 요 내 용
	이현서 전북도 정책기획관	**<주제: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정책>** **1. 정책 목표 및 추진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3% 감축을 목표로 함. - 2024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562천톤CO2eq.) 대비 106.6%를 달성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임 - 폐기물 부문의 감축량 달성률 저조는 사업지표 변경으로 보완 예정 **2. 재정 투자 및 감축 부문** -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4조 3,999억원(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제외)을 탄소중립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 에너지 전환·산업, 수송, 농축산 부문에 주로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 **3. 대표 추진 과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새만금 그린산단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 -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을 도모 **4. 거버넌스 및 정책 방향** -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등 협력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 -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산업, 농축산, 자원 순환, 정책 기반 등 탄소중립 정책 아젠다와 연계 추진
지정토론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부위원장	○ **(경기도와의 협력 및 관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 격차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북도도 이와 유사하게 기후 불평등 해소 조례와 기후 보험 도입을 준비 중임을 언급 ○ **(전북도의 현재 상황 진단)** 전북의 탄소중립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앞으로는 '과학 행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 달성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 ○ **탄소 중립 대응 방향** - **(국민주권 정부 대응)**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호남권의 AI와 재생에너지 전략을 활용해 전남과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전북만의 독자적 전략)** 강원, 제주와 함께 '3특'에 속하는 전북이 독자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특히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30조 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전북도 내부의 고민 및 제안** - **(RE100 기업 조사)** 도내 RE100 관련 기업 현황과 달성률을 파악하는

구 분		주 요 내 용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 **(햇빛 학교)** 학교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 - **(도유지 및 국유지 활용)** 도내 유휴 부지 태양광 설치 사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특히 배주현 과장님의 결단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햇빛 발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에 감사를 표함. 미륵사지 주차장과 같은 국유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마무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계속 시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 재단 팀장	○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기후위기 대응은 곧 재생에너지 전환만이 아니라, 폭염, 혹한과 같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 전북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전북도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아닌, 정책기획관이 직접 발표에 나선 것은 전북도가 탄소중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또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 **(경기도와의 협력 및 국제 표준 제안** · 경기도의 G-REC(경기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자가용 전력에 대한 인증서 발급은 이미 I-REC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는 국제 표준이 존재 · 기업 재생에너지 재단이 올 3분기 내에 I-REC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므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 ○ **국민주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새 정부의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단이라는 세 가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특히 호남권 지자체들이 RE100 산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 - 전남은 이미 '바람 햇빛 연금'을 시작하고 기후에너지국 신설을 요구하는 등 가장 앞서나가고 있으며, 광주도 RE100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임. - 정부 발표를 기다리기보다는, 전북도가 먼저 "우리는 이런 방식의 RE100 산단을 원한다"고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3특' 지역 간 연합 제안** - 강원, 전북, 제주 세 특별자치도가 개별적인 경쟁보다는 연합하여 유사한 점을 함께 제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 - 특히, 해상풍력이 세 지역 모두에게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인 만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RE100 산단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전북이 50년 전부터 풍력 발전을 시작한 역사적 맥락을 활용하여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갈 필요

구 분		주 요 내 용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 지원센터장	○ **경기 RE100의 지속 가능성 질문** - **(정책의 안정성)** 최고 의사결정자(도지사)의 변경에 따라 정책이 변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기 RE100이 제도적, 법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 **(장기 로드맵)** 현재 2030년까지의 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 궁금증을 표함. ○ **도-시군 간 정책 연계성 문제 제기** - **(정책 소통 부재)** 현재 전주를 비롯한 기초 지자체들이 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도의 명확한 메시지나 방향성이 시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분석의 필요성)** 도의 목표치와 시군이 세운 목표치 및 정책이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안** - **(명확한 메시지 전달)** 도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실행할 수 있는 세부 사업을 만들어 주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 **(재정적 지원)**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계획된 좋은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경우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

○ 질의·답변

구 분	주 요 내 용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경기 RE100의 지속 가능성 질문(이승한센터장)에 대한 답변>** ○ **경기 RE100의 핵심과 방향성** - **(속도와 실행력)** 경기 RE100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년, 10년 뒤의 목표보다 3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에 집중 - **(제도적 기반)** 에너지 관련 조례와 제도는 이미 충분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힘. - **(지속 가능성 확보)** 경기 RE100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경기도의 부지 활용 방안 등 중앙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안. 이는 경기도를 넘어 수도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음 - **(RE100의 목적)** 경기 RE100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RE100 의무 달성이 목적이 아님. 경기도 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사업을 지속

구 분	주 요 내 용
	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부지 확보와 실행 주체를 찾는 데 집중. - **(지분 계약 문제)** 지붕 태양광에 대한 지상권 문제는 여전히 딜레마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현서 전북도 정책기획관	**<도 · 시군 간 정책연계성 문제제기 질문(이승한센터장)에 대한 답변>** ○ **전북도의 탄소중립 및 RE100 추진 방안** - **(광역-기초 지자체 연계 강화)**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군이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함께 검토하고 협력.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 - **(RE100 추진 조직 검토)** 광주시의 RE100 추진 본부 사례 지적에 대해 뼈아픈 조언으로 받아들임. 현재 여러 부서에 얽혀있는 RE100 관련 정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RE100 전담 조직에 대한 고민하고, 에너지 조사도 검토하겠음
한정수 탄소특위 위원장	○ **전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제언** - **(단체장의 의지와 조직의 중요성)** 단체장의 정책 의지는 예산과 조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지만 전북도는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하며, 정책기획관의 직접 발제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 - **(지자체 간 경쟁의 불가피성)** 지자체 간의 경쟁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 **(경쟁 우위 확보의 필요성)** 전북도는 남을 깎아내리는 경쟁이 아니라, 전북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현재 전북이 이 부분을 찾는 데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임성진 탄녹위원장	○ 과거 중앙 탄소중립 위원회 활동 당시, 산업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안 된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관료주의적 안정성과의 갈등 속에서도 경기도의 '경기 RE100'을 추진해 낸 김연지 과장님의 추진력에 감탄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부위원장	○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기 성찰 및 제안** - **(조직 개편 제안)**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의 직속 기구화가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하여, '탄소중립 정책과'와 '청정에너지수소과'의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청정 에너지 수소과: 국가 정책 대응 업무에 집중, 탄소중립 정책과: 도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규제 완화 업무에 집중) - **(경기도 정책을 통한 자성)** 재생에너지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유치

구 분	주 요 내 용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함. 경기도가 기업 유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북은 다음 단계를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 **(차등 전기료와 기업 비용 분석)** 전북의 중요한 기업 유치 포인트인 차등 전기료가 경기도의 기업 유지 비용과 어떻게 작용할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 - **(전력 이슈 기업 발굴)** 전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목록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경쟁이 아닌 생존 문제)** 전북에게 탄소중립과 기업 유치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

2-5-8.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 요

○ 일 시 : 2025. 11. 20.(목) 10:00~11:00

○ 장 소 : 도회회 세미나실(1층)

○ 참석현황 : 30여 명(특위 위원, 전북도 탄녹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

○ 주 최 :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 주요 내용

○ 강의 :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팀장)

□ 세미나 결과

○ 강의

구 분	주 요 내 용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	○ (사례 공유) - 프랑스 파리의 변화 : 15분 도시와 자전거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거리에서 생활하자는 비전, 코로나 이후 자전거 이

구 분	주 요 내 용
	용률 급증, 2026년 자전거 100% 도시 목표. 승용차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바꿔서 대기질이 개선됨. 시민들의 지지를 얻음. (국내 사례로 전주 첫 마중길과 광주시 푸른길 공원) - 도넛모델 제시 : 국가의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를 도넛모델로 도식화하여 구조화함.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인 서울의 노원구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에너지 및 지역 산업 전환 이슈가 당면한 보령시가 기후정책과 복지 정책이 함께 제시됨) - 기후위기의 대한민국, 나의 동네와 도시, 기후가 아닌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냄. <사례> - 여주 구양리 : 1000KW 태양광으로 마을버스와 식당 운영 - 경기도 : 1가구 1태양광 주도, 임차인도 가능하도록 변화 필요. - 전남 영광 : 기후와 농업을 동시에 살리는 영농형 태양광 - 서울시 성동구 : 공공마을버스로 15분 도시를 완성함. - 파주시 사례 : 공공주도로 중소기업 RE100 지원 - 생태와 복지의 균형 : 공정하고 포용적 공간, 깨끗하고 녹색인 영역

○ 질의·답변

구 분	주 요 내 용
김정기 탄소특위 위원	- 차 없는 거리와 공공셔틀버스 지원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주변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 - 마을 태양광 사업의 경우 마을에서 운영하기에는 자본 조달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답변) 생산될 에너지를 담보로 신협이나 농협에서 저리로 대출받음. 에너지기금 지원 등으로 자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땅주인은 찬성하는데, 임대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전북도는 송전선로 부족으로 개통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민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답변) 자가소비나 마을에서 먼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은 어렵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개통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한정수 탄소특위 위원장	- 새만금 지역에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도넛모델을 새만금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자도 특례로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진형석 탄소특위 위원	- 태양광 사업에 대해 기술적 부문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함 - 소비자가 수익성을 확인되어야 하고 수익창출이 있어야 확대가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봄. - 파주 정수장의 경우 중소기업에게 비현실적인 사업으로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답변) 국내에서는 전기요금이 다소 저렴해서 유인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치가 용이한 형태로 개발이 필요함. 파주의 경우 수익성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와 중소기업에게 수익성이 있고, 약간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박은재 탄녹위원	- 전주시의 경우 아파트형 태양광이 자부담 140여만원으로 사업성이 있음. - 파주의 경우 공사가 독점하고 있어 시민참여는 어려운 상황임. - 마을에서 기금 마련과 관련하여 저렴한 정책지원금을 받아 추진했음. - 부안군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전주시가 구매하는 형태로 가야함.

2-6. 현 장 활 동

2-6-1. 연찬회(고창군 일원)

개 요

○ 일 시 : 2023. 3. 16.(목) ~ 3. 17.(금) 1박 2일

○ 장 소 :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일원

○ 참석현황 : 탄소특위 위원 9명

○ 내 용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청취
- 전북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고창운곡 람사르습지' 탐방

2-6-2. 현지 의정활동(완주군 일원)

개 요

○ 일 시 : 2024. 9. 24.(화) ~ 9. 25.(수) 1박 2일

○ 장 소 : 완주군(봉동, 고산) 일원

○ 참석현황 : 탄소특위 위원 8명

○ 내 용

- 수소 버스 및 트럭 생산 현지 시찰(현대자동차 전주공장)
-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과정과 활용방법 등 시찰(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

* 벌목 또는 수집된 목재를 소각, 열분해 등을 통해 조성된 에너지원

2-7. 성명서·기자회견

2-7-1. 성명서 발표

개 요

○ 건 명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반대 성명서
○ 일시·장소 : 2023. 4. 20.(목) 10:30, 도의회 기자회견실
○ 참 석 자 : 한정수 위원장, 시민단체대표 등 10여명
○ 내 용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획으로 재수립 촉구

□ 주요 내용

○ **차기정부로 온실가스 감축**을 넘기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

※ 5년간(' 23~' 27) 24.8% 감축, 남은 3년간('28~ '30) 75.2% 감축

○ 산업계의 **감축목표 하향**(14.5%→11.4%)

○ **국제 감축분 3,750만톤 과다**(당초 계획보다 400만톤 추가 설정)

○ '30년까지 **탄소 포집·활용·저장**으로 1,120만톤 감축은 **현실성이 없음**

○ 도는 제4차 전북 지역에너지계획을 도민참여형으로 수립한 저력있음. 전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담대한 계획**이 되어야 함.

참고 **성명서 자료**

절망과 불확실성만 빼곡히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대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절망적인 국가 계획이 발표되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을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탄소 배출로 막대한 부를 쌓아온 산업(계)의 책임만을 줄여주는 낯 두꺼운 계획이다.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대를 표했음에도 사회적 협의 없이 밀어붙인 불통의 계획이다.

산업계의 감축 목표 하향은 당장만 달콤한 사약이다.

RE100은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이자 목표이다. 이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없애 탄소를 배출하지 않음을 뜻한다. 전 세계의 화두이자 국내 기업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계시장의 규제는 EU의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U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탄소 발생을 따져 관세를 부과하거나 탄소국경조정(CBAM)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게 하는,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에 따른 일종의 추가 부담금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품목에 시범 도입하며, 2026년부터는 본격 도입된다.

세계 경제 흐름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기존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단맛이 나겠지만, 결국은 극약을 처방한 것과 다름없는 근시안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재생에너지 축소와 사실상의 감축 목표 하향 조정은 미래산업과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기업에도,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누적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에 우리나라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선형감축목표(매년 평균적 감축모델)를 제시했을 때,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가 제시한 국제감축 모델보다 누적배출량이 증가해 지구 온도 상승을 3℃까지 올릴 수 있는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의 기본계획은 이전 선형 감축 경로를 개선하기는커녕, 기존 경로 대비 5.2억 톤의 추가 배출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시했다. 당시 IPCC가 급격한 감축모델인 오목형을 제안한 것은 초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게 될 탄소 발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형조차도 벗어나 블록형 감축모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23~2027년 기간의 감축량이 48.9백만톤, 2028~2030년 기간의 감축량이 166.3백만톤으로 5년간 24.8%의 감축을 달성하고, 남은 3년간 75.2%의 감축을 달성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2023~2027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2.0%)과 2027~2030년 동안의 연평균 감축률(9.3%)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이해하기 힘든 계획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 정부에서는 감축의 부담을 지지 않고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조치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실소를 짓게한다.

국제 감축분 3750만톤, 국제적 비난 대상이 되겠다는 것인가.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감축분 400만톤이 추가로 등장했다. 이는 해외에서 탄소 감축분을 챙기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연도별 계획조차 없다. 기본계획에서 국제 감축에 대해 추후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활용시기 ('26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감축 경로 없이 '30년에만 감축량을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것은 기후정의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지만, 개도국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감축분을 개도국에 전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 감축 거래 규정을 수립하며 '자국의 NDC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

았고, 앞선 2021년에는 배출권 발행을 잠정 중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파리협정 이후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제 감축분을 확보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2개 국가는 2019년 교토체계에서의 국제 감축분을 2030년 NDC에 사용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EU, 스위스, 일본도 이전의 감축이 파리협정 체계에서 인정받더라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이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했음에도 그렇다.

지금 없는 기술을 반드시 만들어 감축량으로 포함하겠다는 억지.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으로 112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CCU(탄소 포집·활용)과 CCS(탄소 포집·저장)의 목표량은 각각 640만톤과 480만톤이다. 그런데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CCS와 달리 CCU는 배출 시점만 늦출 뿐 결국은 배출이 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적용될 IPCC 가이드라인에도 빠져있다. 현재도 산업 공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탄산음료나 드라이아이스 제조에 쓰고 있다. 설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 CCS를 이용해 480만톤을 감축하더라도 640만톤에 달하는 CCU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2021년 정부가 발표한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봐도 2027년에 상용화가 예상되는 기술은 찾을 수 없고, 2030년쯤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술들의 목표치도 640만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감축량으로의 인정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어떻게 넘겠다는 것인지 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전북의 미래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난 1월 고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가 예정돼있던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10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 전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완전히 뒤엎은 내용이다. 정부가 국민을 담보로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더 이상 걸 기대가 없다. 계획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고,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붕괴가 곧 다가올 것이다.

정부 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춘 숫자놀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전라북도는 제3차,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을 도민참여형으로 수립한 저력이 있다.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담대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기본계획이 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생에너지 확대부터 RE100 기업 유치, 농업부문 전동화 및 기본소득형 농촌 재생에너지 등 전라북도의 탄소중립을 위해 도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꺼내놓고 민관이 함께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자.

전라북도가 앞장서야 14개 시군 계획이 바로 선다. 도민들은 준비됐다. 현 정부의 절망을 따를 것인지, 도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 것인지, 전라북도가 분명하게 답할 차례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엉망진창 탄기본을 폐기하고 재수립하라!

둘째,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셋째,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넷째, 탈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다섯째,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여섯째, 기후 변화의 위기를 완충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일곱째, 전라북도는 정부계획을 넘어, 도민과 함께 과감한 계획과 방향으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라!

2023. 04. 20.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기후위기전북행동(군산,완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탄소중립전북행동, 농산어촌개벽대행진 전북추진위,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얘들아놀이밥먹자

2-7-2. 기자회견 발표

개 요

○ 건 명 :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10. 31.(목) 10:30, 도의회 앞
○ 참 석 자 : 서난이 부위원장, 권요안 위원, 시민단체 등 20여 명
○ 내 용 :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 선포 전국 동시 기자회견

□ 주요 내용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 제정
○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참여자의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우선 구매 의무화법' 마련
○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 보장

참고 **기자회견문 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미 일어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기후위기는 이미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시각각 더 크고 더 강력하게 더 견디기 힘든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향상시키며,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9%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며,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시민주도와 참여로 성정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막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참여로 당신의 용기와 응원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참여자의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우선 구매 의무화법'을 마련하고,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의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4. 10 . 31.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2-8. 5분 자유발언 · 도정질문

2-8-1. 5분 자유발언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방안 마련 촉구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탄소중립과 교육에서 길을 찾자**
○ 발언의원 : 한정수 위원장
○ 발 언 일 : 2023. 2. 2.(목)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주요 내용

○ 미래 발전의 선도적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탄소중립에 있음
○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탄소중립은 당장 실천해야 할 문제임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기업유치 등 다양한 특례를 개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야 할 것임

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적 방안 등

개 요

○ 안 건 명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적 방안,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 발언의원 : 한정수 위원장

○ 발 언 일 : 2023. 7. 24.(월)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주요 내용

○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이 재생에너지 메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 전라북도가 육상풍력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이미 강원, 경북, 전남은 육상풍력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전북이 재생에너지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육상풍력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전북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제를 적극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탄소인지예산제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모든 교육과정에 탄소중립의 의미와 해결과제가 녹아들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완화 방안은 학교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임.

○ 학교가 에너지절약만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어렵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소비는 물론이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야 함.

○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와 교육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 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함.

다. 14개 시군 모두 참여하는 전북 지속가능발전 추진

개 요

○ 안 건 명 : 14개 시군 모두 참여하는 전북 지속가능발전 추진
○ 발언의원 : 한정수 위원장
○ 발 언 일 : 2023. 10. 11.(수)【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주요 내용

○ 전라북도가 12월 중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앞선 계획이 되어야 하며,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반드시 담겨야 함. 이를 위해서는 14개 시·군 전략과 과제를 함께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각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군별 지원센터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 2022년 7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 3월「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음.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 지속가능발전은 전북 발전에 관한 모든 정책의 기본 전략이 되었음

○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지속가능발전임. 그러나 행정영역만으로 지속가능발전 전략도 탄소중립도 완벽히 실행해 내기는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동참은 필수임. 도내에는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전주, 정읍, 임실만이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법과 제도는 만들어졌으나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환경을 지켜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아가기 위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동시에 노력해야 하며, 도민과 시민사회가 모두 동참할 수 있어야 함.

○ 14개 시군 모두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립되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발전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라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함

라.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도내 활용 방안 대안 마련

개 요

○ 안 건 명 : RE100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발언의원 : 한정수 위원장

○ 발 언 일 : 2024. 4. 19.(금)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주요 내용

○ 새만금을 필두로 하는 전북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력계통 연계가 시급함. 새만금 산단만이 국내 유일하게 RE100 실현이 가능한 곳이라며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하면서 강조한바 있음.

○ 문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갖춰졌더라도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수송, 유통, 소비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력계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에 가까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력계통 연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함.

마. 일상·대형화된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추진단 신설 제안

개 요

○ 안 건 명 : 일상•대형화된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 추진단 신설 제안

○ 발언의원 : 한정수 위원장

○ 발 언 일 : 2024. 9. 10.(화)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주요 내용

○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후와 환경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함.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전북도는 **43%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점검할 수 있는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을 서둘러야 함. 또한 도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업단지나 기회발전특구 등에 공급하여 수도권 RE100 기업 이전에 활용한다면, 향후 전북의 큰 경쟁력이 될 것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스템 체계를 벗어나야 하며, **특례를 통해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이양받는 절차를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전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림.

바. 탄소중립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 부족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 자강(自强)위한 특단의 대책 고민해야
○ 발언의원 : 한정수 위원장
○ 발 언 일 : 2025. 4. 23.(수)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주요 내용

○ 과거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설치**를 제안했지만, 도는 조직개편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고 지적. 그러나 최근 조직개편안에 올림픽유치추진단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도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추진단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이는 탄소중립에 대한 도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

○ 전북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해외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전북투자청 설립** 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냄. 16개 시도 및 해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전북이 내세울 만한 특별한 장점이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 특히, 기업 유치를 위한 메가 샌드박스의 준비 부족과 관련 부서 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꼬집으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선 던져놓고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함.

○ **전북의 수출 비중이 1% 이하로 하락**한 것에 대한 도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돈을 벌어 전북이 발전하기 위한 **명확한 시작점과 특단의 대책**이 부재하다고 강조.

○ **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이 과정이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고, 함께 노력하여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

2-8-2. 도정질문

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개 요

○ 안 건 명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 발언의원 : 한정수 위원장
○ 발 언 일 : 2023. 6. 8.(목) 【제4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폭염, 태풍, 국지성 폭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 기후변화,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봄

○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연·지구가 인간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지?

➡ 동의함. 지난 3월 20일 IPCC*총회에서 확정된 6차 평가보고서에서도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화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기후위기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

* IPCC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 파리기후변화협정과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 2018. 10월 제48차 IPCC총회에서 전세계 195개국 합의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채택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사회, 범정부, 지자체, 민간이 모두 함께 서로 협력하여 공동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함.

○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하며, 그렇게 하겠는지 물음

➡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음.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확정에 대한 계획은?

➡ 국가계획이 올 4월 확정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개월 앞당겨서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앞당길 수는 있는지?

➡ 도 계획수립의 법정기한은 내년 4월까지이나,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임.

○ 2030 목표 및 2050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물으심

➡ 조금 더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함.

다만,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음.

탄소중립 정책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것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됨.

○ 탄소중립은 전환과 적응의 문제이며, 전라북도 14개 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위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탄소중립에 관한 의식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행정부 중심으로 더 환기시키고 캠페인도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임.

○ 도지사가 생각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은 무엇인지?

➡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 함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도지사가 생각하는 전북도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목표는?

➡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목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전북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함.

우리 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가기조에 맞춰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달성하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이차전지, 그린수소, 농생명 등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 ('18년 배출량) 24,851천톤 → ('30년 배출량) 14,911천톤 / 9,940천톤 감축(40%)

○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전북도가 설정한 가장 핵심 전략산업은 무엇인지?

➡ 전라북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산업(34%), 건물(24%),

수송(19%), 농축수산(15%) 순으로 에너지·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 전체 배출량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태양광, 풍력,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외에도 전력저장 기술, 친환경자동차, 농생명, 바이오, 자원순환 환경기술 등을 탄소중립과 관련된 전략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올해 전북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10개 분야* 연구회를 구성하여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특화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함께 전라북도가 혁신·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탄소중립, 첨단모빌리티, 지능형기계·조선, 탄소·융복합, 에너지·수소, 재난·안전, 문화관광콘텐츠, 방산(신규), 첨단바이오, 첨단산업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와 도의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우리도 실정에 맞게 이행력이 담보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전략 산업은?

➡ 우리 도는 더 새롭고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고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생명산업'을 핵심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려고 함.

'생명산업'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전북만의 특화된 농생명, 청정에너지, 수소, 이차전지 등 생명산업을 육성해서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지구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성장을 우리 전북이 선도해 보겠음.

또한, 적자생존 방식의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또 하나의 생명산업으로 동력의 축을 만들어 나가겠음.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함.

○ 지난 회기 권요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소기술원 유치 진행 상황은?

➡ 정부는 '22.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기술원과 같은 수소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최근 우리도는 관련 부처의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지난 5월 「수소기술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용역 중임.

용역의 주요 내용은 수소기술원 전북 유치의 당위성 등 타당성 검토와 조직 및 인력, 예산 등으로 앞으로 산업부·수소 보급 민관협의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기술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 새만금 신항만을 수소전용 특화항으로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물음

➡ 현재 해수부에서 수소 항만 구축을 위해 '24년 5월까지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신항을 포함하여 수소항만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임.

새만금 신항처럼 신규 항만 건설에 맞춰 수소항만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큰 만큼, 해당 용역에 새만금 신항만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전북도를 재생에너지 최고·최대 생산단지로 개발한다면 탄소중립 실현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음.

◘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

정부는 '21년 7.5%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30년 21.6%, '34년 3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우리도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급 확대를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추진 상황과 몇 기가를 준비 중인지?

◘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21년 통계 기준, 우리도의 설비용량은 4.5GW로 전국 2위이고, 발전량은 8,314GWh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새만금 인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로 추진되고 있음.

새만금 내측의 3GW 발전사업의 경우 육상태양광 0.3GW 사업은 준공('21~'22)되었고, 1단계 1.2GW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해상풍력은 서남권 2.46GW, 군산시 1.6GW 등 2개 사업 4GW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임.

서남권 사업은 2.46GW 중 실증단지 60MW는 '20년 1월 준공되었고, 현재 발전해역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민관협의회를 구성 중임.

다만, 7GW 발전용량은 실제 발전단지 조성 면적, 현재 8MW급인

풍력발전기의 대용량화 기술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조성 시점에서 최대 10GW 이상 확대가 가능함.

○ 그린수소 생산과 RE100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그린수소 생산 시기에 대해 물음.

◘ 정부는 청정수소에 대한 공급계획을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 위원회를 통하여 밝힌 바 있음.

('30년) 수소공급량 1.94백만톤

- 그린수소 0.25백만톤 / 블루수소 0.77백만톤 / 해외수입 0.92백만톤

('50년) 수소공급량 27.9백만톤

- 그린수소 3백만톤 / 블루수소 2백만톤 / 해외수입 22.9백만톤

우리도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타가 사업의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8년부터 연간 15,000톤, 1일 약 4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예정임.

참고로 40톤의 수소는 수소승용차(넥쏘 기준) 8,0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용량임.

또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중임.

'22.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25년 완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1일 1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부안군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할 예정임.

※ 1일 1톤의 수소는 수소승용차(넥쏘 기준) 200대 완충 가능 용량

앞으로 우리도가 그린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 새만금국가산단 5·6공구 3.7㎢(약112만평)가 국토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22.7월)되어 새만금청은 '22~'26년까지 총 2,882억원(국비 235, 민자 2,647)을 투입하여 RE100 산업단지를 조성 중임.

주요 사업으로는 재생에너지(태양광 30MW)단지내 인입을 위한 전력망 구축, 망 유연성 활보를 위한 ESS설비, 산단내 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관제센터 운영, IoT를 활용한 스마트교통,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22년에는 국비 625백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통합관제센터 부지(4,125㎡)을 매입하였고, '23년에는 국비 356백만원을 투입하여 통합관제센터 설계 및 정보화전략수립용역(산단내 에너지관리 플랫폼)을 추진 중임.

○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큰 나라이며 앞으로도 수출이 중요한지?

◘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1년 70%(수출 36%, 수입 34%)로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함. '22년 수출 6,839억달러, 수입 7,132억달러, 무역규모는 13,971억달러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우리나라는 반도체, 화학, 자동차 등을 비롯하여 수출중심의 경제를 운영하고 있음. 수출중심의 국가에서 RE100 이행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국가가 앞서가지 못한다고 전북도가 못할 건 없다는 의견임.

◘ 새만금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보유한 우리도의 RE100 이행 여건은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최근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도의 RE100 기업지원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정책여건을 잘 활용하여 RE100 이행 선도지역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음.

○ 올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규모는?

◘ '23년 본예산 총 8조 8,684억원 중(일반회계)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119개 사업, 총 4,890억원(본예산 대비 5.5%)으로 '22년 대 비 1,422억원을 증액하였음.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주요사업으로는 전기 및 수소차 보급 1,505억원, 도시 숲 등 조성 652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0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70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96억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1억원 등이 있음.

매년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 확대와 더불어 내년 예산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

○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탄소중립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 총사업비 기준으로 우리 도의 '24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은 총 521건, 13조 6,663억원이며, 이중 탄소중립 관련 사업은 33%에 해당하는 158건, 4조 6,342억원(국비 3조 3,580억원)임.

주요 탄소중립관련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7,000억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3,834억원,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3,377억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사업 2,627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2,444억원 등 총 158건임.

○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특례, 수소산업 관련 특례 등 추가 준비상황?

◘ 특례발굴 현황은 신·재생에너지법 시범사업 특례 등 4개 과제를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민참여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임.

※ 특례발굴(4개 과제)

① 신·재생에너지법 시범사업 특례

- 신기술 보급등에 도내 실증 우선

②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관리 특례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환원, 공유화 기금 조성

③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 특례

- 직접 PPA 거래한도 도지사 결정(1MW 이상 → 1MW 이하도 가능)

④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특례

- 지정조건이 갖추어질 것이 확실할 경우 지정절차 면제 및 간소화

현재는 수상변전소 설치 특례를 발굴하여 수상건축물과 수상레저가 가능하도록 검토 중임. 또한, 수소의 신산업분야인 수전해 설비 특례 발굴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도 해나가겠음.

특례 발굴에 있어 의원님의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전북도가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송배전, 소비까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은?

◘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함.

현재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7개 광역

지자체에 에너지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임.

대체적인 평가는 에너지 중심의 다양한 정책 발굴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우리 도는 도내 기관 활용, 타 지자체 에너지 전문기관의 운영현황 분석과 전문가 간담 등을 통해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음.

○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인 '(가칭)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의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도정 전반이 관련되어있는 만큼 실행력 제고방안이 필요함.

이에, 지난 회기에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환경녹지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상향 조정하였음.

아울러,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전 실·국이 각 부문별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 중(현재 50개 사업)에 있으며, 부서별로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

한편, 작년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담당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산하에 탄소중립정책팀과 기후변화대응팀 2팀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추진단 설치 여부는 향후 조직개편 시 기존 조직과의 업무 연계성, 능률성, 통솔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나. 탄소중립,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도

개 요

○ 안 건 명 : 탄소중립,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도해야
○ 발언의원 : 한정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 발 언 일 : 2024. 10. 8.(화) 【제4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주요 질의·답변 내용(탄소중립 실현 관련)

한정수 위원장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을 질의함.

○ 2030년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전북도가 설정한 2030년까지 43%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질의.

➡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감축 계획을 세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목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내년 전면 실행 의사 질의.

➡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전 실·국에 확대 적용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 정착시키겠다고 답변.

○ 탄소중립추진단 설치: 탄소중립 정책의 총괄적인 기획, 조정, 점검을 위한 '탄소중립추진단' 설치 필요성 제기.

➡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변경하여 기획·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 다만 국장급 단위의 추진단 신설은 기준인건비 및 다른 실·국 조정 문제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

○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전북도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및 2030년까지의 완공 계획, 타 시도 대비 진행 속도 질의.

➡ 7GW 규모의 해상풍력 계획이 있으며, 인허가 및 전력계통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전남 대비 발전량이 적은 것은 규모의 차이라고 해명.

○ 계통망 문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보내는 문제와 한전의 계통망 독점으로 인한 지역의 에너지 주권 확보 어려움 지적.

➡ 계통망 연결 공사는 한전의 고유 영역으로 도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주민 민원과 한전의 우선순위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 계통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도의 독자적인 공사는 재정적, 역량적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

<재질의 및 의견>

○ 도지사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조직 개편이나 예산 투입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요청.

○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계통망 문제를 전북도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특례 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

2-9. 조례 제·개정

가.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 발의의원 : 특위 위원 11명
- 윤정훈 의원(대표발의)
○ 의 결 일 : 2023. 4. 14.(금)【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제안 이유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식생 갯벌, 바다숲 등 우리 도가 보유한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 흡수능력을 인정받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실태조사, 탄소흡수원의 확충, 조사·연구(안 제5조 ~ 제7조)
○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호 및 복구 계획·추진(안 제8조)
○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필요성 홍보(안 제9조)
○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참고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연안의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조성·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지역에 대한 대책
7.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 도지사는 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흡수속도 측정과 새로운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보호·복구) ① 도지사는 태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

○ 발의(찬성)의원 : 10명

- 발의(1명) : 한정수 위원장(대표발의)
- 찬성(9명) : 김슬지·김정기·이수진·진형석·장연국·박정희·전용태·이정린·김명지 의원

○ 의 결 일 : 2023. 12. 13.(수) 【제4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제안 이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은 우리 학생들의 생존의 문제이자 앞으로 살아갈 미래사회에 관한 문제로,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며 살아갈 학생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책 수립 등 전라북도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탄소중립 기본교육 계획 수립 ·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사.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아.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차.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참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는 미래세대이자 주체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교육과정”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 과정에 경제·산업·사회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한 지식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수·학습에 관한 계획과 방법을 말한다.
2. “탄소중립 기본교육”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탄소중립 기본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탄소중립 기본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교육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탄소중립 기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에 대한 소양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
5.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①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관하여 산업의 구조적 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탄소중립 기본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찬성)의원 : 9명

- 발의(2명) : 한정수 위원장(대표발의), 윤정훈의원
- 찬성(7명) : 김정기·이수진·권요안·김성수·김슬지·이정린·전용태 의원

○ 의 결 일 : 2024. 5. 17.(금)【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가. 위원장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지명이 아닌 선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및 의견 청취 등의 방안에 관해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3 신설)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5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도지사----------호선(互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3(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현 행	개 정 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탄소중립백서) ① (생 략)	제41조(탄소중립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4. 제11조 및 제28조제1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라.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찬성)의원 : 11명

- 발의(2명) : 한정수 의원(대표발의), 김동구 의원
- 찬성(9명) : 서난이·김정기·김성수·권요안·윤수봉·박정규·황영석·강동화·임승식 의원

○ 의 결 일 : 2024. 6. 19.(수)【제41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제안 이유

도민참여형·공유형 신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 · 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설치를 권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에너지의 안정적 구축”,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등을 기본원칙에 추가함. (안 제3조)

○ “에너지 정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동체”를 추가 정의함. (안 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 인원 조정(안 제11조제2항)

○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추가함. (안 제5장 제27조)

○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추가함. (안 제5장 제28조)

○ 공공부지 임대 등 추가함. (안 제5장 제29조)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촉진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도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 위해 「에너지법」 제4조---------- ---------- ---------- ---------- ----------.
제2조(기본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 기본이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북자치도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2. --------- 에너지 절약시책---------- ---------- ----------.
3. 전북자치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 등에 관한 적용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주요 소재지를 두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체 및 단체(이하 "업체"라 한다) 등에 한한다.	5. ---------- ---------- ---------- 단체(이하 "업체" ----------.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제3조(기본원칙) ① ----------

현 행	개 정 안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행하여야 한다.	----------.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신 설>	3.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당해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8. ---------- 해당 지역----------
<신 설>	9.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신 설>	10. 에너지 관련 기관,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
<신 설>	1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사업 추진
4. 도민참여 에너지관련 홍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4. 수요자 중심의 도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참여·소통·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신 설>	5.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신 설>	6. 도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신 설>	7.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 고려
<신 설>	12. 도민 참여 에너지 관련 홍보 및 에너지

현 행	개 정 안
	관련 자료의 공개와 도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신 설〉	②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해야 한다.
〈신 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에너지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정의) ① ----------
1. "에너지" 란 연료·열·전기를 말한다.	1. "에너지" 란 ----------.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 에너지체계" 란 ----------
3. "연료" 란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연료" 란 ----------
4. "온실가스" 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란 ----------
5. "신·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란 ----------

현 행	개 정 안
지 사용 자재를 말한다.	----------.
7. "미활용에너지" 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7. "미활용에너지" 란 ----------.
8. "사업자" 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자" 란 ----------.
9. "환경표지인증제품" 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환경표지인증제품" 이란 ---------- 인증받----------.
10. "자발적 협약" 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 협약" 이란----------.
11. "산업 부문" 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 부문" 이란 ----------.
12. "수송 부문" 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 부문" 이란 ----------.
13. "건물 부문" 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3. --- 부문" 이란 ----------
14. "공공 부문" 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4. --- 부문" 이란 ----------.
1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제3자의 에너	15. --------- 전문기업" 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지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시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 ---------- ----------.
16. "시민단체" 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6. "시민단체" 란 ---------- ---------- ---------- --------.
<신 설>	17. "에너지 정의" 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신 설>	18.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이란 에너지 수요자인 전북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9..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중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신 설>	20. "에너지취약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신 설>	21. "에너지복지" 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

현 행	개 정 안
	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신 설>	22.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신 설>	2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② (생 략)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최소화하도록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온실가스배출저감 등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온실가스 배출저감 ----------.
② 사업자는 산업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② ----------

현 행	개 정 안
노력하고 산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에너지 관련 ----------.
제7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책무) ① ---------- 에너지 절약----------.
②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
제8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보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도민의 권리) ① ---------- 보급받----------.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생 략)	제9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신·재생에너지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① ----------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15명 내외----------

현 행	개 정 안
하고,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신 · 재생에너지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제11조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
1. 해당업체의 용역 · 자문 · 연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1. 해당 업체----------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1조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해촉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① (생 략)	제1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1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 10일 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산업 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산업 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
②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③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③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

현 행	개 정 안
에 따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송 부문) ① ~ ③ (생 략)	제19조(수송 부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도시 내외의 화물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체계로 관련규정에 따라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절약형 체계로 관련 규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건물 부문) ① 도지사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등「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하여 검토 할 수 있다	제20조(건물 부문) ① ----------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토할 -------
② 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21조(공공 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1조(공공 부문) ① ---------- 민간 부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3. ----------「절전형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건축·도로·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의	④ ----------

현 행	개 정 안
제·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다.	---------- 협의할 ------.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책무 등	제5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신 설>	제27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

현 행	개 정 안
	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 2.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현 행	개 정 안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 설>	제29조(공공부지 임대 등) ① 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의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 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책무 등
제27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신 설>	제31조(민간 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도지사는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 ~ 제30조 (생 략)	제32조 ~ 제34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마.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 발의(찬성)의원 : 8명

- 발의(1명) : 서난이 의원(대표발의)
- 찬성(7명) : 한정수·권요안·김동구·김성수·염영선·이수진·진형석 위원

○ 의 결 일 : 2024. 10. 17.(목)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제안 이유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정책목표가 되어 분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장거리 송전 시스템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함

□ 주요 내용

가. 분산에너지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정함(안 제4조)

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분산에너지의 현황과 전망 등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심의·조정 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융자 및 기금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아.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자.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확대를 위해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보급량·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공급 등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 및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특화지역지정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융자)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효율성·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공감대 확대)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안내·홍보·조사 및 연구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찬성)의원 : 11명

- 발의(2명) : 한정수 위원장(대표발의), 국주영은 의원
- 찬성(9명) : 김동구·김명지·김성수·김슬지·김정기·박정희·윤정훈·임승식·진형석 위원

○ 의 결 일 : 2025. 4. 3.(목)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

□ 주요 내용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의3 신설)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3(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contents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3-1. 특위활동 성과 177

3-2. 특위활동의 아쉬운 점 183

3-3. 정책제언 184

3-4. 맺음말 188

제3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3-1. 특위 활동 성과

3-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도모

□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의제가 아니라, **국가적 비전이자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임. 이는 경제발전, 에너지 소비와 생산 방식, 산업 경쟁력 전반과 직결되는 문제임.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산업·경제·사회·교육 등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북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도모하고 도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토론회·포럼·연석회의 개최, 성명서 발표,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음.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협력·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을 모았음.

○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내 14개 시·군과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음.

3-1-2.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

□ 특별위원회는 전문가·시민단체와의 토론회(3회) 및 포럼(4회)을 통해 **에너지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전북이 육성해 온 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산업·제도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특례, 탄소중립 도시 및 환경교육 시범도시 육성 특례 등을 제안하고, 동부권 산림자원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촉구함.

□ 아울러, 전북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탄소중립 과제 발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음.

○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저감 농법과 축산기술 개발 등 핵심 사업 추진의 필요성 강조

○ 단순 태양광·LED 설치 수준의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나아가, **에너지 판매가 가능한 공동체 마을 조성 및 정책 지원 필요성 제시**

○ 도시숲 조성, 친환경 차량 보급, 전기 전용차로 구축 등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제시

○ 건물 부문이 도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고, **건물 탈탄소화를 통한 감축 목표 설정**의 필요성 강조

3-1-3. 탄소중립 의지 표명

□ 전북 환경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면 폐기와 재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특히 산업계 탄소 배출 목표 완화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감축 부담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감축 목표 시기를 늦추거나 국제 감축분 확대에 의존하는 정부 계획은 **RE100* 실현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하였음.

*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 아울러 전북은 제3·4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도민 참여형으로 수립한 경험과 저력**이 있음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업유치, 농업부문 전동화, 농촌 재생에너지 등 **전북형 탄소중립 전략을 민관이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칼럼 게재와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앞장섰으며, 정부와 국회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파리협정의 2030년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 목표에도 불구하고 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실태를 비판하였음.

○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함**을 역설하였음.

3-1-4. 탄소중립 대안 마련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정책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

○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추진단' 신설 필요성을 제안하여 전북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견인하였으며, 전력 시스템 운영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 분권적 에너지 전환 논의를 선도함.

○ **도정질문**을 통해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북의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수소기술원 유치 및 새만금항의 수소 전용 특화항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함.

○ 아울러 전북을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초석을 마련함.

3-1-5.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전면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2025년 예산안부터 전북 전 실·국에 전면 시행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전북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체계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의 탄소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제도

○ 당초 2025년도 예산안은 4개 국(건설·미래·농업·환경)에 한정해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모든 실·국 전면 시행**으로 확대하여 전북도가 선도적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를 통해 전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예산 시스템을 확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 핵심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음.

3-1-6.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행정적 기반을 확립**하였음.

① 신규 제정

○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전북이 보유한 갯벌·바다숲·염습지 등 블루카본 자산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존·관리·확충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중점학교 지정·교원 연수 확대·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확보함.

○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송전망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제도화함으로써 **분산에너지 육성 및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② 일부 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 확대·이행책임관 상향(환경녹지국장→행정부지사)·사무국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크게 높임.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참여형·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사업장·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지역 단위 에너지 전환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3-2. 특위 활동의 아쉬운 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음. 위원회는 도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기존 행정체계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하였음.

○ 첫째, **기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체제의 한계.**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이는 기존 행정·의사결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였으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실행력 확보에는 제도적·조직적 제약이 여전히 남아있음.

○ 둘째, **에너지 분권의 한계.**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나, 중앙부처와의 조율 및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음.

○ 셋째, **전담 조직의 부재.** 탄소중립은 전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도는 인건비와 조직 개편 문제를 이유로 특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탄소중립추진단' 신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로 인해 특위는 정책 방향 제시와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음.

3-3. 정 책 제 언

3-3-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

○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실천 전략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함.

○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로, 전북도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도민·시민사회·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함. 도가 앞장서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함.

3-3-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철저한 시행

○ 전북특별자치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3%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것은 정부 목표보다 3% 높게 제시한 것으로 실제 목표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5년여의 기간동안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 이에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천적 전략과 방안 마련 및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전북도와 14개 시·군 관계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민 전체가 수용할 만한 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대한 시기별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반영으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함.

3-3-3. 재생에너지 대안 마련 및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고, **육상풍력 개발과 지원**은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송배전, 소비까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공사 형태의 에너지 전담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공사' 설립**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야 함.

○ 전북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주요 생산지임에도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산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이나 전주·익산 등 기회발전특구에 공급하여 수도권 RE100 기업 유치에 활용**하고, 나아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스템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권한을 이양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음.

3-3-4.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현장 교육 강화

○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과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 생태환경,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탄소중립 시점이 늦춰질수록 수십 배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도내 학교에서 **조속한 기후변화·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함.

3-3-5.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참여공동체 육성 등의 사업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낮은 편으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특별자치도의 흐름과 계획 및 내용을 탄소중립과 통합하고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당면한 지역적 낙후와 인구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탄소중립 정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및 실천이 요구됨.

3-3-6. 14개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

○ 탄소중립을 통한 전북의 변화와 미래상을 담기 위해 14개 시군의 전략과 과제가 함께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14개 시군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함.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본전략이 지속가능발전으로 행정영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전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해 **14개 시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립**되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 발전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할 것임.

3-3-7. 새만금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

○ 문재인 정부 당시 전북에 7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며, 2023년까지 7GW 규모의 발전량은 지역민과 도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기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바, RE100 실현을 위해 새만금으로 몰려드는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할 수 있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해야 함.

새만금 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입주 계획으로 새만금 인근에서 전력공급이 가능해 RE100 이행 의무기업의 목표 달성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3-8. 탄소중립 재정 및 거버넌스 강화

○ 자체 기금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기금을 확대** 및 **녹색채권 발행 등 독자적 재원 조달 모델**을 도입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재정 불안정성에 대비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추진단)을 신설**하고,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야 함. 예산 계획 시 탄소 감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전북의 강점인 탄소흡수원 복원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3-4. 맺 음 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3년 동안 활동하며, **전북도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안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비록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지만, 향후 **상임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contents

제 4 장

부 록

4-1. 주요 일간지 보도 191

4-1. 주요 일간지 보도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신문 · 통신 스크랩】

순	구 분	제 목	일 자
1	회의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22.12.13.
2		5차 업무보고 청취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25.11.20.
3	업무보고	도의회, 탄소중립 추진 관련 업무보고 청취	'22.12.28.
4		탄소중립 추진 관련 2차 업무보고 청취	'24.7.25.
5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도와 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논의	'25.2.20.
6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도 및 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관련 4차 업무보고 청취	'25.7.24.
7	연석회의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녹색성장위 협력소통 다짐	'23.3.7.
8	토론회·포럼 등	도의회-민주도당 정책토론 "탄소중립 특례발굴 나서야"	'23.2.23.
9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 초청 포럼	'23.4.10.
10		전북형 탄소중립 10대과제 발굴을 토론회 개최	'23.7.24.
11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토론회'	'25.2.4.
12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 개최	'25.3.20.
13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포럼서 재생에너지 지속발전 모색	'25.4.3.
14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지역 대응방안 등 모색 포럼	'25.7.30.
15		세미나 개최 –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	'25.11.20.
16	현장활동	탄소중립 실현 선도 현장방문	'24.9.25.
17	성명서	도의회·환경단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반발	'23.4.21.
18	기자회견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명시한 입법 촉구	'24.10.31.
19	5분 자유발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교육혁신	'23.2.2.
20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제안	'23.7.24.

순	구 분	제 목	일 자
21		탄소중립 이행 위한 탄소중립추진단 신설 촉구	'24.9.11.
22	도정질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23.6.8.
23		탄소중립,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도해야	'24.10.8.
24	조례 제·개정	윤정훈도의원,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 대표발의	'23.4.12.
25		전국 최초, 탄소중립 교육과정 운영조례 제정	'23.12.14.
26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기반 마련	'24.5.19.
27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6.27.
28		전북 분산에너지 활성화 선제 대응	'24.10.4.

1 【 2022.12.13. -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金北日報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위원장 한정수·부위원장 서난이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익산4), 부위원장에 서난이 의원(전주9)이 선출됐다. 위원은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슬지(비례대표), 김정기(부안), 염영선(정읍2), 윤정훈(무주), 이수진(비례대표), 진형석(전주2) 의원 등 총 11명이다.

한정수 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가 출범하게 되어 뜻



한정수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

깊게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의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전략과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기자

새전북신문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003면 종합



"탄소중립 실천 전략 정책 마련, 동참 노력"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출범

제12대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익산4), 부위원장에 서난이 의원(전주9)을 선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탄소중립 특위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등과 관련해 전라북도 역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도의회의 선도적인 탄소배출 감축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정수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위가 출범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전략과 다양한 정책마련으로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특위 위원은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슬지(비례대표), 김정기(부안), 염영선(정읍2), 윤정훈(무주), 이수진(비례대표), 진형석(전주2)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복정권 기자

2 【 2025. 11. 20. - 제7차 회의 】 "5차 업무보고 청취 및 결과보고서 채택"

全北日報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내달 본회의에 결과보고서 상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년 간의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둔 20일 세미나를 열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다음달 15일 제4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운영되는 특위는 이날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를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고 이지선 팀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세마니에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세미나 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 실국별 마지막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립·이행 중인 탄소중립 기본계획 상시 점검 체계 △도 차원의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전담 컨트롤타워 부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내실 추진 등이 당부됐다.

그동안 특위는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5차례 업무보고를 듣고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전북형 특례 발굴' 등 7차례의 토론회·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도민 관심 제고에 힘썼다.

6차례 5분 자유발언과 2건의 도정질문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방안과 탄소중립추진단 설립 등 과제를 제시하며 도정의 정책 변화를 견인했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북자치도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철저한 시행, 재생에너지 대안마련 및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새만금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 등 8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백세종 기자

3 【 2022.12.28. - 제2차 회의 】 "업무보고 청취"

全羅日報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002면 종합

"탄소중립 실현 방안 구체화"

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관련정책 활성화 등 방향 논의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8일 전북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 및 생활실천 방향 ▲전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염영선 위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은 현재 탄소중립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지역대학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 등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특별자치도 실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특색있는 선언적 퍼포먼스 실행 등 특별자치도로서의 내실있는 역할 모색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구 위원(더불어민주당·군산4)은 전북도가 차세대 2차전지 시장 주도와 함께 탄소중립의 선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등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난이 위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주요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황판 구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성과를 요하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사업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위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 조성, 태양열 이용 등의 포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가 도민의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 홍보와 함께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구현 방안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익산4)은 탄소중립 실현은 생존의 문제이며 산업, 경제 등 전반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김대연기자·red@

전주매일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003면 종합

전북만의 특색있는 탄소중립 선언적 퍼포먼스 실행

특별자치도로서의 내실 있는 역할 모색도 중요

도의회 탄소중립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8일 전라북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 및 생활실천 방향 △전라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염영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탄소중립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지역대학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 등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특색있는 선언적 퍼포먼스 실행 등 특별자치도로서의 내실있는 역할 모색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구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도의 'RE100'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전북도가 차세대 2차전지 시장 주도와 함께 탄소중립의 선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으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등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난이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도정 방향에 대해 도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꼬집으며,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주요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황판 구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성과를 요하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사업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명확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도와 의회 간 협력 모델 마련도 주문했다.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 조성, 태양열 이용 등의 포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가 도민의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 홍보와 함께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구현 방안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탄소중립 실현은 생존의 문제이며 산업, 경제 등 전반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도 차원의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전북도 탄소중립 녹생석장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계획을 보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한 발 앞서 전북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전략적 분야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계획과 연동하는 방향 등 적극적인 전북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4【 2024. 7. 25. - 제4차 회의 】 “2차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도 탄소중립 추진 관련 2차 업무보고 청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전면적 시행 및 탄소중립추진단 설치 운영 주문

기사입력 2024-07-25 오후 6:30:00 | 최종수정 2024-07-25 18:3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5일, 전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 환경산림국 등 5개 국과 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스그린카(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스녹색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스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기반 구축 스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스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과 이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염영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조성사업의 목적이 연관기업 유치 등을 통한 해상풍력 산업 선도의 장을 업근하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신정읍-신계통 송전선로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인 정읍시 주민들은 사업내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해당지역이 사업 수익은 없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희생만 요구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절차와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위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청북콜서비스, k-패스, 공유 모빌리티 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내 교통 오지까지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택시 지원 예산에 대해 묻고, 지원 대상을 일반택시보다는 전기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택시회사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탄소중립 실천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기존 시범운행 지구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운행지구 확대가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지구에 대한 활용 당부와 함께, 새로 선정되는 시범운행지구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해풍힘 조성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한 목표 하나만으로 해풍힘을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해풍힘 조성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탄소중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비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북자치도에서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를 꼭 실국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대표적인 탄소중립 지역으로 거듭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추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추진단이 설치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기사제공 : 전주매일

5【 2025.2.20. - 제5차 회의 】 “3차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도와 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논의

[전주=뉴시스] 20일 진행된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0일 전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현황과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전북도 및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현황 ▲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현황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계획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이 추진하도록 유도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염영선 위원(정읍2)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이를 연계한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한 도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12)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기반 구축,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수상·육상 태양광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이 기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농생명단지 내 영농형 태양광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이와 연계한 기업 유치를 위해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 환경교육이 3·4학년 대상에 한정된 이유를 질의하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위원장(익산4)은 "모든 심의와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위원회 소속 사무국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가 주체가 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의 선도적 자세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6【 2025.7.24. - 제6차 회의 】 “4차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도 및 도교육청 탄소중립 추진 관련 4차 업무보고 청취

탄소중립·산업 유치 현안 질타…전북도,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시사일보=김영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7월 24일, 새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환경산림국 등 도청 5개국과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전북도 대응 전략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서난이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와 관련, 전남은 체계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전북은 명확한 입장과 대응이 부족하다며 지적하며, 심도 있는 전략 마련을 당부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하며, 관련 설비 설치 시, 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지연 및 미달성 부문에 대한 사유와 조치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세심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또한 도시 중심의 BRT 사업과 농촌 중심의 행복콜서비스 사업의 수요조사 및 예산 배분에 있어 형평성 있는 접근을 당부했다.

▶ 국주영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도내 이견으로 전북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선점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북이 초거대 영농형 태양광 특구 조성을 위한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새만금 농생명단지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활용할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해당 단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 염영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은 탄소배출 감축에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남권 계획 여부를 질의하며, 지역별 안배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과의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수소 생산시설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도 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책했다. 또한 SK의 AI 데이터센터가 울산에 설치되는 상황에서 당초 새만금에 유치를 약속받고도 도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점, 삼성의 반도체클러스터 설치에 대해서도 도가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기업체를 접촉하지 않았던 현실을 지적하며,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 【 2023. 3. 7. - 연석회의 】 "전북 2050 탄소중립 · 녹색성장위원회"

전북연합신문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녹색성장위 '협력·소통 다짐'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7일 고궁담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양 위원회의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정수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과 전라북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임성진 위원장(전주대 교수), 박종연 전북대학교 교수, 김병택 군산대학교 교수,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 센터장 등 외부위원 4명과 강해원 환경녹지국장,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행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으며 이번 달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계획과 연계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아이디어를 모아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데 한 뜻을 모았다.

한정수 위원장은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중립 인식개선 및 실행과제 발굴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두 위원회가 서로 논의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성진 위원장은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중립 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발굴에 전라북도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전북연합신문(http://www.jbyonhap.com)

전주매일

2023년 03월 08일 수요일 003면 종합



탄소중립 실현 협력 · 소통 다짐

위원회의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7일 고궁담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양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8【 2023. 2. 23. - 정책토론회 】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

全北日報

2023년 02월 24일 금요일 003면 종합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공동으로 2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도의회

전북도민일보

2023년 02월 24일 금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민주 도당 정책토론
"탄소중립 특례발굴 나서야"



전북도의회는 23일 민주당 전북도당과 공동으로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전북도의회 제공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특례 발굴이 필수요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트랜드를 감안하면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통해 전북이 강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거둬올 수 있다는 견해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공동으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참남정 전북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탄소중립 특례 사례를 비교하여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아이템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탄소중립 도시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육성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대 이종희 교수는 "동부권의 우수한 산림자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이 가진 탄소중립 분야의 강점을 살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탄소중립 정책 마련과 홍보, 교육,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9 【 2023. 4. 10. - 전문가 초청포럼 】 "국가 및 지방정부 대응전략"

전민일보

2023년 04월 11일 화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기후 위기 대응 전문가 초청 포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10일 전북·전주·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과 유혜숙 전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과 임원,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상황에서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전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는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30년 5대 기업 매출이 30조가 급감할 것이다"면서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산업부문에서는 오히려 감축량을 줄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류생존과 직결되는 기후변화와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전주·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전북연합신문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전북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10일 전북·전주·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과 유혜숙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과 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초청 강사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관련 전문가로,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전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유진 부소장은 IPCC 제6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국가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30년 5대 기업 매출이 30조가 급감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산업부문에서는 오히려 감축량을 줄이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2021년보다 후퇴했고, 차기 정부에 감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표자로 참여한 장남정 전북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와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부문별 감축사업으로 에너지 전환·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방안과 이행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인류생존과 직결되는 기후변화와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전주·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10 【 2023. 7. 24. – 토론회 】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

새전북신문

2023년 07월 25일 화요일 002면 종합

탄소중립 실현 차별화된 정책개발 전략 필요

서울=강영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4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됐다. 전북의 지리적·산업적 특성 등과 연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반영한 전북형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과제 발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정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주현 (사)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박종연 전북대학교 교수, 최우순 전주시에너지센터장,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북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새만금에 최종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현 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의성시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전라북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주목해야할 지점을 언급했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주최,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 토론회'가 24일 전문가와 의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서혁철 기자

전북형 탄소중립 10대 과제 발굴 토론회
건물 탈탄소화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

강남정 센터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등 중점과제 및 에너지,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정책기반 등 부문별 감축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성진 교수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민주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이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특별자치도의 흐름과 계획 및 내용을 탄소중립과 통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종연 교수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목표에서 개별 가구의 역할이나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개별 가구에 에너지 자각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우순 센터장은 "전북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의 탈탄소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부위원장(전주5)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전라북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선도 자세를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한정수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재,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 【 2025. 2. 4. - 토론회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 전북 선도 실행 목표·전략 공유
익산시 지원센터, 성공적 운영 위한 방안 모색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4일 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전주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개소를 앞둔 익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정수 위원장의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병도 국회의원의 축하영상에 이어 서거석 도교육감과 임성진 전북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호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이 '익산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익산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한 뒤 지역 내 실천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현황 및 이슈'를 주제로 지자체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검토 사항을 살폈다.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좌장인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진규 익산시의원,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진홍 희망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실행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지방 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짚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한 위원장은 "탄소중립 문제는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탄소중립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도가 정책 실행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탄소중립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 환경 넘어 산업·경제로 접근해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익산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발제·토론자들, 한목소리로 공직·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센터 역할 정립 중요성 강조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열린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이 탄소중립에 대한 공직·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이 자리에서 한정수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라며 "환경이 아니라 산업·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중 첫 번째가 에너지 전환인데,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 전략적 목표 설정을 위한 고민이 없고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소극적으로 임관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각 자치단체 조례상 설치돼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면서 "행정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센터가 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머리 역할을 할 것인지 손발 역할을 할 것인지 둘 다 맡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실제에 있어 만약 익산에 대기업이 유치된다면 탄소중립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에 있어서 센터가 사업이나 사업비 분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선만을 사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승인 등의 절차를 단순 넘겨 부서가 아니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넓나 공소식 전체를 아우르며 부서 간 논의·협조를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센터 지정 방안, 실무 전문 인력 확보, 지역 특성에 따른 역할 부여, 센터의 높은 인건비 비중, 센터 인력 고용 불안정(계약직), 탄소포인트 제도 확대 및 활성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기업체 참여, 정부 공모를 통한 예산 확보, 시민 의식 고취,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정수 위원장은 "단체장은 조직과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탄소중립에 대해선 대부분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적당히 하려는 모습뿐"이라며 "환경을 넘어 삶의 모든 부분과 연관돼 있는 만큼, 현재는 물론 미래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 【 2025. 3. 20. - 토론회 】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

전북도민일보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특위 위원,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탄소중립과 예산운용'을 주제로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20일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중앙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005면 종합

전북 효과적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 모색

특별위 기획포럼…기후대응 기금 운용-예산활용안 논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 주최,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특위 위원,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한정수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각각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탄소중립과 예산운용'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서난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이 참여해 전북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활용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13 【 2025.4.4. - 토론회 】 “탄소중립 2차 기획포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포럼서 재생에너지 지속 발전 모색

뉴스1 입력 :2025.04.04 08:59 수정 : 2025.04.04 08:59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 2차 기획포럼을 갖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4.4./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 2차 기획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종회의실에서 전날 열린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이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위 위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도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의 ‘호남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혁 과제’와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에너지 3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대응과제’ 등이 있다.

전력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행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지역 전력시장 도입, 송전망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자치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의 에너지 3법 개정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며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정책 수립,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 도입, 산업 연계형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정수 특위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2차 기획포럼 개최,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공유

전북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

기사입력시간 : 2025/04/03 [18:48:00]

김영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2차 기획포럼 개최,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공유

[시사일보=김영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에너지 3법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 2차 기획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특위 위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도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호남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혁 과제'를,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에너지 3법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대응과제'를 발표하며, 전력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행 전력시장 체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지역 전력시장 도입, 송전망 주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의 에너지 3법 개정에 발맞춰 지역 자원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며,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정책 수립,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도입, 산업 연계형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좌장인 임성진 위원장을 중심으로이주현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염영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북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정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전북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 【 2025. 7. 30. – 포럼 】 "탄소중립 지역 대응방안 모색"

전북도민일보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015면 사람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 지역 대응방안 등 모색 포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세미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을 주제로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은 타 시도의 에너지전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전북형 RE100 전략과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위원장과 양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장의 축하 인사로 시작됐으며,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이현서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이 나서 각 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아 기자

全北日報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012면 사람



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기후위기 대응 지역특화 탄소중립방안 발굴 정책포럼

지역특화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기후위기 대응 지역특화 탄소중립방안 발굴 정책포럼'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와 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JBS탄소중립포럼, 탄소중립전북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포럼 책임교수를 맡은 유남희 전북대교수와 임성진 전북특자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한정수 전북특자도의회 탄소중립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전북특자도의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서난이 전북도의원, 이승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동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팀장이 나선 지정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특화방안의 발굴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연지 경기도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탄소중립과 RE100 사례'라는 발제를 통해 경기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 산업 민간의 특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강모 기자

15 【 2025. 11. 20. - 세미나 】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세미나 및 탄소특위 활동 결과 보고

탄소중립 이행 위한 지속적 관심·정책 지원 촉구



세미나 및 탄소특위 활동결과 보고

[대한뉴스방송 강철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3년여 간의 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20일 세미나 개최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특위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에너지 전환이 만든 도시의 변화'를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 고이지선 팀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 마지막 실국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이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도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전담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전북도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5차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전북형 특례 발굴' 등 7회의 토론회·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도민 관심 제고에 힘써왔다.
아울러 6차례의 5분 자유발언과 2건의 도정질문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방안 ▲탄소중립추진단 설립 등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도정의 정책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북도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철저한 시행 ▲ 재생에너지 대안 마련 및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 새만금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 ▲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8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한정수위원장은 "지난 3년간 전북도 행정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제안하는 데 앞장섰다"며 "전북도의회는 탄소중립 실현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5일(월), 제4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全北日報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014면 사람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위, 현대차 전주공장 등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4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고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먼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버스와 수소전기 트럭의 생산 과정을 둘러봤다.

이후 고신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의 활용 현황을 청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로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정수 도의원

한정수 위원장은 "지역 기업과 환경 자원 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탄소중립실현 선도 현장방문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24일 탄소중립 실현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4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고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우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탄소중립 관련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버스와 수소전기 트럭의 생산 과정을 둘러봤다.

이후, 고산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찾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의 활용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로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아 기자

17 【 2023. 4. 20. – 성명서 발표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반대"

전북도민일보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003면 종합

환경단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반발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8곳의 시민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이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절망적인 계획이다"며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대를 표했음에도 사회적 협의없이 밀어붙인 불통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선형감축 목표보다 5억2천만톤의 추가 배출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하고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라북도는 정부계획을 넘어 도민과 함께 과감한 방향으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全羅日報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004면 종합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전북지역 환경단체 한목청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계획
배출 더하는 무책임한 조처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전북지역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해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산업계를 위한 하향 목표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절망적인 계획"이라며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재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021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감축목표보다 5억 2000만톤의 추가 배출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현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의 부담을 지지 않고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어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면서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는 제3·4차 지역에너지계획을 도민참여형으로 수립한 저력이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부터 RE100 기업 유치, 농업부문 전동화, 농촌 재생에너지 등 전북도 탄소중립을 위해 민관과 함께 수립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2042년)과 관련해 지난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데 이어, 이튿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는 탄소중립포기계획이라면서 전면적인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연기자

"수명 다한 영광원전 10년 더 가동 안된다"

전북도의회와 환경단체들 대 정부 성토
과거로 회귀한 탄소중립계획 폐기 촉구

전북도의회와 환경단체들이 윤석열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기후붕괴를 조장할 우려가 큰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0년 가까이 고장과 부안지역 수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온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가 하면, 국내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사실상 하향 조정하는 등 과거처럼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전북행동 등 7개 기관단체 대표자들이 20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의회 한정수 탄소중립특별위원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유남희 공동대표, 탄소중립전북행동 김진태 상임대표 등 7개 기관단체 대표자들은 20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국가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재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연평균 탄소 배출량 감축률을 2023년~27년은 2%로, 이후 2027년~30년은 9.3%로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기관단체 대표자들은 이를놓고 "현 정부 집권기에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부담을 지지않은 채 차기 정권에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려고 국제 감축분 400만 톤을 추가한 것 또한 논란거리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기간을 뒤로 늦추거나 국제 감축분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국가계획은 RE100, 즉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달콤한 사약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8.5%포인트(23.9%→32.4%)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8.6%포인트(30.2%→21.6%) 줄여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에맞춰 오는 2025년과 26년에 각각 폐로가 예정됐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10년씩 더 연장하기로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로 37년 된 한빛원전은 품질위조 부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말썽난 짝퉁부품 사건과 모두 260여 개에 달하는 방호벽 공극 발견 파문 등 크고작은 논란 속에 가동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면서 접경지인 고창과 부안 일원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2면에 계속〉 /정성학 기자

18 【 2024. 10. 31. – 기자회견 】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명시한 입법 촉구'

전북 시민단체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명시한 입법 필요"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부 의원은 31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며 "그런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는 그 목표와 계획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이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지름길"이라며 "대규모 석탄 발전 원조국인 영국도 142년 만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춘 마당에 우리도 국민 누구나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전북도의원 역시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와 에너지시민단체, 기자회견
내년 2월까지 5만명 서명받아 정부에 제출
서난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31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도의회 앞 광장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정부와 국회는 탈석탄·재생에너지확대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의 목소리가 전북에서 이어졌다.

31일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도의회 앞 광장에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의회 특위와 시민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 즉각 제정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법' 마련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 부당조치 철회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내년 2월 2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서난이(전주9) 부위원장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면서 "국민 누구나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北日報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003면 종합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 재생 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목표 및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 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제사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석탄 발전의 조기폐쇄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지난해 약 9%)으로,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며 "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지난 3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관계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全羅日報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006면 경제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3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석탄법 제정·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원철기자

"탈석탄법·재생에너지 우선구매법 마련하라"

전북자치도의회-시민단체 정부 기후위기 대응 등 촉구 5만명 시민 서명운동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에너지 시민단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31일 전북도의회 앞 광장에서 정부와 국회에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의무화법 마련 등을 촉구하며 시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참여자의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법을 마련하고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도 주장했다.

도의회 탄소특위와 에너지관련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내년 2월2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언기자

19 【 2023.2.2. – 5분 자유발언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탄소중립 사회 전환"

전주매일

2023년 02월 03일 금요일 001면 종합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교육 혁신"

한정수 도의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탄소중립, 인류 생존의 문제… 특자도 목표로 삼아야

도교육청, 학기제 개편 논의 등 통해 특자도 활용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교육의 혁신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정수 의원(익산 4 · 사진)은 지난 2일 제39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정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을 얻었다"라며 "낙후의 오명을 씻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탄소중립"에 있다고 단언했다. 기후변화 자체는 환경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기후변화와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경제와 산업의 문제이고 인류생존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전북이 아무리 좋은 특례를 만들어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기업은 결국 RE100 등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라며 "그렇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은 또한 전북교육청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전북교육의 역할과 변화 그리고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과 특례 발굴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계의 무비판적 관행을 깨뜨리고 교육의 변화를 위해 학기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이 9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 나아가 교원의 정기인사는 왜 꼭 3월과 9월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관행에 따른 불편과 문제를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은 "이 같은 관행으로 3월 신학기 교육현장은 전쟁통 같다는 말까지 들릴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는 전년도 12월에 출납이 끝나고 학교회계는 다음연도 2월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불일치로 행정적 공백과 차질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학년말 학생평가나 졸업식 등의 마무리 업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미 절반이 넘는 학교가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학기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교육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 굳어진 교육현장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20 【 2023. 7. 24. – 5분 자유발언 】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등 제안"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제안"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전라북도의회는 한정수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이 24일 제4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적 방안: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정수 의원은 "전례없는 장마로 전국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을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서 "이 모든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결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교육적 실천방안으로 먼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수 의원은 "현재의 학교 환경교육은 말 그대로 생태환경교육에 국한되어 있고, 환경문제를 만들어내는 다국적기업, 국가적 에너지 시스템 등 환경을 둘러싼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역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내용이 강화되었지만,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기후변화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다루는 교과도 과학, 도덕, 사회, 보건 교과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와 같이 환경교과 중심의 선택과목 편성이 아니라 모든 교과과정에 탄소중립의 의미와 해결과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하다면서 "모든 교사들의 탄소중립 교육역량 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학교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수 의원은 "도내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 중 태양광은 단 184개소에 불과한 상태로 대부분이 자체전력으로 활용하고 한전과 계약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23개소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학교와 교육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학교신설이나 증개축 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육상풍력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탄소인지예산제(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 【 2024. 9. 11. - 5분 자유발언 】 "탄소중립추진단 신설해야"

한정수 도의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이행 위한 탄소중립추진단 신설해야"

한정수 도의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이행 위한 탄소중립추진단 신설해야"

기사입력 2024-09-11 오후 10:08:00 | 최종수정 2024-09-11 22: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기행행정위원회)이 지난 10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기후와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전북도가 탄소중립 이행과 연계된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탄소중립추진단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이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요구되며, 경제적 부담과 도전과제도 수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북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에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산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산단이나 도내 기회발전특구 등에 공급해 수도권 RE100 기업 이전에 적극 활용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스템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전북이 갖고 있는 무기인 특례를 통해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이양받아 전력계통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혁신과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핵심 주체로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2 【 2023. 6. 8. - 도정질문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한정수 전북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선제적 대응 촉구

전국 입력 2023-06-09 *09:30:31* 박민홍 기자 *0개*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이 8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전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경제·산업의 문제이자 인류 생존의 문제"라면서 "전북도가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새만금신항을 수소특화항으로 개발해 수소기술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EU가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최종 승인했고 전세계 409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적 대응 차원에 이르렀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OECD 최하위인 상황에 국가적 대응을 기대하기 보다 지방정부가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설치해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통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김관영 지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례, 전력거래 특례 등 관련 특례를 적극 발굴 중에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h009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 【 2024. 10. 8. - 도정질문 】 "탄소중립,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도"

한정수 전북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선제적 대응 촉구

전국 입력 2023-06-09 *09:30:31* 박민홍 기자 *0개*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이 8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전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경제·산업의 문제이자 인류 생존의 문제"라면서 "전북도가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새만금신항을 수소특화항으로 개발해 수소기술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EU가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최종 승인했고 전세계 409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적 대응 차원에 이르렀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OECD 최하위인 상황에 국가적 대응을 기대하기 보다 지방정부가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설치해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통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김관영 지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례, 전력거래 특례 등 관련 특례를 적극 발굴 중에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h009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 【 2023. 4. 12. - 조례 제정 】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전북도민일보

2023년 04월 12일 수요일 003면 종합

윤정훈 '탄소흡수원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 통과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 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정훈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 전북이 가진 서해안 연안의 뛰어난 탄소흡수원을 조사하고 보존·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이번 조례 발의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관리, 확충,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복구계획 수립 등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윤정훈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이 보유한 비식생 갯벌, 바다숲, 염습지 등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 흡수능력을 인정받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존·관리 및 확충에 기여해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전민일보

2023년 04월 12일 수요일 003면 종합

'연안 탄소흡수원 활용 조례안' 환복위 심사 통과

윤정훈 전북도의원 대표발의
14일 본회의 의결 거쳐 공포



전북도의회 윤정훈의원(사진·무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관리, 확충, 또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복구계획 수립 등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위탁 근거 등을 포함했다.

윤정훈 의원은 "전북이 보유한 비식생 갯벌, 바다숲, 염습지 등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 흡수능력을 인정받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보존·관리 및 확충에 기여해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제399회 임시회 2차 본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25 【2023.12.14 –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탄소중립 교육과정 운영조례 제정"

한정수 도의원, 전국최초, 탄소중립 교육과정 운영조례 제정

> 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하고 기본교육 활성화 등 제도화 마련
>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환경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생 교육방안 담겨

[아시아뉴스전북=유병철 기자]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제도화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13일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 과정에서 경제·산업·사회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한 지식 함양이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에 관한 계획과 방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연계하여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 확대,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정수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는 미래세대이자 주체로서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생태전환 등 환경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정수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26 【 2024. 5. 19. - 조례 개정 】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기반 마련

김성아 기자 승인 2024.05.19 10:09 댓글 0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제409회 임시회에서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 3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제15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자료수집 및 여론 조사의 기능을 명시해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한정수 의원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에 있어서도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정책방향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여 전북자치도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27 【 2024. 6. 27. – 조례 개정 】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정수 도의원,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강보 웹승인 2024-06-27 17:49 수정 2024-06-27 17:49 댓글 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0회 제1차 정례회 제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 구축,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등을 기본원칙에 추가 △에너지 정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동체 추가 정의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추가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도민참여형,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치를 권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28 【 2024. 10. 4. – 조례 제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발의"

"전북 분산에너지 활성화 선제 대응"

서난이 도의원 관례 조례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4일 개회하는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발의된 조례는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강모 기자

서난이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발의

전국 최초… RE100 참여 우수기업 유치 기대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사진·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북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은 △매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노력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